

2017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조사

2017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조사

제주평화연구원 편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42 |

2017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조사

인 쇄: 2017년 12월 28일

발 행: 2017년 12월 31일

편 자: 제주평화연구원

발행인: 부성옥

발행처: 도서출판 오름

등록번호: 제2-1548호 (1993. 5. 11)

주 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0-8 서일빌딩 4층

전 화: (02) 585-9122, 9123 / 팩 스: (02) 584-7952

E-mail: oruem9123@naver.com

ISBN 978-89-7778-486-4 93340

*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 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서문

전통적으로 국제관계란 정부 중심의 관계였고, 외교의 대상은 주로 타국의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국제관계나 외교정책은 이제 생각하기 힘들습니다. 평화는 특히 그렇습니다. 국민과 국민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공공외교법이 제정된 것이나 공공외교사업이 강화되는 것은 바로 오늘날 국제협력과 평화증진을 위해서 국민의 인식을 이해하고 바람직하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진은 일찍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010년부터 평화와 국제협력에 관한 여론과 인식을 분석해 왔습니다.

2017년 연구에서는 조사의 대상을 확대하였고 조사방법을 개량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진들이 2017년 수행한 연구결과를 모아서

『2017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조사』라는 제목 아래 단행본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연구에서 이성우 연구위원은 시계열방법을 활용해서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평화가치관의 변화에 주는 경제·정치요인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상황이 개선될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경제상황이 악화될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인택 연구위원은 2017 제주포럼의 결과자료를 통하여 아시아의 정책결정자와 민간전문가의 인식을 분석하였습니다. 역내 엘리트들이 제주포럼을 통해서 생각의 다양성을 표현하면서도 인식의 공통성을 발견해 나가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중윤 연구위원은 2017년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안보 엘리트들이 어떤 어휘 구사를 통하여 관련 의제를 어떻게 토론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이들이 사용한 어휘를 통해 그들의 의식이 안보 관념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샹그릴라 대화는 참가국을 대표하는 국방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방위기조에 대하여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그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통해서 결론 내렸습니다.

바야흐로 국민외교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 전문가의 견해, 여론지도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연구결과의 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의 국민들과 엘리트들의 인식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대외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공공외교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 연구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언과 충고를 통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내년에는 더 커다란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제주평화연구원장 서정하

▣ 서문 _서정하 / 5

제1장 평화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경제·정치요인의 영향:

시계열방법을 활용한 통일 및 대북정책의 여론 동향분석 · 이성우

I. 들어가는 말 | 11

II. 기존 연구: 여론과 대북정책 | 14

III. 여론조사 자료와 통계분석 기법 | 22

IV. 분석의 결과와 논의 | 29

V. 결론 | 51

평화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경제·정치요인의 영향:

시계열방법을 활용한 통일 및 대북정책의 여론 동향분석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I. 들어가는 말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이고 권위적인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도 정치지도자들은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중요한 정치과정의 지표로 사용한다.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사회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어진 인물, 법안, 의제, 또는 정책에 대해서 대중이 가지고 있는 여론의 동향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통계적 사회조사를 말한다.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의 기원은 19세기 미국에서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모의투표 형태로 여론을 조사하는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언론기관들이

제2장 2017 제주포럼에 나타난 역내 엘리트의 인식 · 한인택

- I. 서론 | 59
- II. 연구의 방법론 | 64
- III. 제주포럼의 대주제와 세션의제 | 69
- IV. 제주포럼의 기초연설과 세션토의: 2017년 vs. 2016년 | 79
- V. 요약 및 결론 | 98

제3장 상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에 나타난 안보 엘리트들의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 · 도종윤

- I. 들어가며 | 107
- II. 상그릴라 대화 | 110
- III. 분석 결과 | 114
- IV. 나가며 | 120
- 부록 | 123

▣ 필자 소개 / 147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향이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통령 선거 시기가 되면 주요 공중파 방송사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연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당일에는 출구조사를 통해서 여론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여론조사가 대중에게 전달되는 형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여론조사는 선거뿐 아니라 정책결과에 참고를 위해서도 활용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부와 여당에 대한 직무수행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 또는 특정한 정책이슈에 대한 대중의 찬반을 묻는 것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어 정책결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정책결정에 지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경향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국민투표의 결과처럼 특정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정치과정에서 합의에 따라 후보 단일화과정이나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과정에도 여론조사의 결과가 실제로 이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서 우리나라의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정치과정에 여론조사의 결과가 활용되는 정책분야 중의 하나가 통일과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치에 있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정책적 지향점의 차이가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정치적 이념선호와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사 당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결론지어진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긍정적인 평가는 51.6%로 과반수를 넘는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는 23.8%에 그치고 있다

(조선일보 2007.2.21). 보수정권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도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이 58.4%인 반면에, 반대는 41.6%로 나타났다(최진옥 2010, 21).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23.5%)와 ‘잘하고 있다’(52.5%)를 합친 긍정적인 평가가 전체의 75.9%로, 부정적인 평가 23.5%를 세 배 이상 앞섰다(한겨레신문 2013.6.23).

실제로 통일연구원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3개월째인 2017년 6월,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하는 형태로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선호를 조사하고 있다(유코리아뉴스 2017.8.9). 최근 진보와 보수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매우 선호 24.2%와 약간 선호 39.5%를 합해 63.7%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에 따른 정권교체로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해석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에 반해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인식과 평가는 가변적이 아니라 고정된 가치평가로 보인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의 유화와 강경의 정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유화적인 특성의 순서는 김대중 정부 61.1%, 노무현 정부 52.9%, 이명박 정부 20.9%, 박근혜 정부 15.9%로 나타났고, 강경적 순서는 이명박 정부 43.8%, 박근혜 정부 38.2%, 노무현 정부 15.4%,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15.2%로 나타났다.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선호도는 정권교체에 따라서 변화하는 반면에 대북정책에 대한 강경과 온건의 평가는 상당히 고정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대북 및 통일정책의 선호의 변화에 대해서 연령, 성별, 지역, 학력, 소득과 같이 고정적인 형태를

지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다. 정치권력의 변화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선거에서 우세해 보이는 사람을 지지하거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우선 지지하는 밴드왜건효과(bandwagon effect) 또는 편승효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여론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를 추적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II. 기존 연구: 여론과 대북정책

민주주의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라고 한다면, 민주주의 정치권력을 운영하는 집권 여당과 행정부가 여론을 파악하고 올바른 의미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은 민주주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구성원인 시민이 자발적으로 의사를 형성했다는 것인지 여론조사의 의도된 방향에 따라서 의사가 형성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여론의 지지는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특정한 방향에서 여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정치권력의 선호가 여론을 유도하는 경향도 분명히 존재한다.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공통된 선호를 공유하는 포용성 이슈(valence issue)는 정치적 목표로서 모두가 공유하는 목표

라고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 추진은 경향성 이슈(position issue)로 접어든 대결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한국사회에서 남북통일이나 한반도 평화는 그 자체로서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포용성 이슈이지만 이를 어떻게 달성하는가에 관해서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포용정책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강경정책으로 선호가 확실히 다른 경향성 이슈로 분리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1970년 2월 20일, 국토통일원이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통해 수행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1%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지만, 통일 방안으로는 ‘유엔감시하 총선거’ 31.9%, ‘모르겠다’ 23.7%, ‘무력통일’ 12.8%로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 1999, 376-382). 1994년의 여론조사에서도 통일에 대한 열망은 오히려 더 높아진 91.6%를 기록했지만(김진환 2015, 89)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다변화된 양상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3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국내 대학생들의 김일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50%를 상회하는 현상과 더불어 북한보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여론이 45%를 차지한다는 다소 통상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박창희 1993).

냉전 질서의 막바지 단계에 있던 1988년,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33.1%에서 탈냉전이 본격화되던 1990년에는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1.3%로 급증했다(동아일보 1990.8.1). 일정 시간에 걸쳐서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제적 수준에서는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의 붕괴에 따른 탈냉전 질서, 국내적 차원에서는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통한

동아시아 주변국 관계개선, 남북한 양자관계 차원에서 관계개선이, 1991년 12월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서」 그리고 1992년 1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이를 위한 여러 차례에 걸친 남북대화와 같은 변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김진환 2015, 82-83).

여론조사가 안고 있는 가장 본질적 문제 중의 하나는 조사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여론이 공유하는 이미지를 여론조사기법을 통해서 분석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박선원 2002; 이정희 2002; 김태현·남궁곤·양유석 2003). 통일부와 국정홍보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햇볕정책이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 지지의 유도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65.6%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1998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햇볕정책에 관련하여 실시된 다양한 여론조사를 수집하여 정부, 보수주의 언론, 자유주의 언론의 3개 종류로 대별하여 비교분석하고 일반국정운영 지지도와 햇볕정책 지지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권은 일반국정운영 지지도가 40%대에 있을 때도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조사기관과 상관없이 항상 높게 나타났고, 많게는 30%의 차이를 보일 때도 있었으며 자유주의 언론의 조사결과가 보수주의 언론의 조사결과보다 5% 정도 높게 나타났다(박선원 2007, 127-129).

햇볕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성향의 결정요인으로 이념적 성향 외에도 지역주의,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통계 요인들을 주요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햇볕정책에 반대하고 진보적 성향이 강할수록 햇볕정책을 지지하며, 지역적 특성도 영향을 미쳐 영남은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성향이 호남보다 강하게 나타

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햇볕정책에 대한 반대가 뚜렷해지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원 2002, 133-142).

대북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여론에 대한 분석에서 북한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북한이 통일의 대상인 형제이자 대치하는 적이라는 이중적 기준을 가진다고 전제하고 이를 각각 민족주의와 현실주의로 분류하여 4가지 유형으로 설정하여 논의했다: (1) 동포의 이미지는 약하고 적의 이미지가 강한 경우 현실주의자(21.3%), (2) 동포의 이미지는 강하고 적의 이미지가 약한 경우는 민족주의자(22.5%), (3) 동포의 이미지와 적의 이미지 둘 다 강한 사람은 보통사람(52.4%), 그리고 (4) 동포의 이미지와 적의 이미지 둘 다 약한 사람은 냉소주의자(3.8%)로 분류하였다. 북한에 대하여 동포와 적으로 인식하는 여론의 성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인구통계적 요소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학력’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도가 있는 변수였고 ‘소득’, ‘성별’ 그리고 ‘이념성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도가 미흡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김태현·남궁곤·양유석 2003).

외교정책의 선호도와 일반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인의 국내정치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4가지 설문을 통해서 (1) 개혁주의, (2) 애국주의, (3) 평화주의, 그리고 (4) 외교적 자긍심으로 분류하였다. 개혁주의는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혁만이 살길이다”는 명제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애국주의는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명제, 평화주의는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다”는 명제, 그리고 외교적 자긍심은 “우리나라 외교는 너무 저자세이다”는 명제에 대한 반

응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개혁주의, 평화주의, 외교적 자긍심 분야에서는 북한에 대한 반응에 대한 네 집단 사이에 상관관계가 유의도가 있음을 보여준 반면, 애국주의를 측정한 분야에서는 네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김태현·남궁곤·양유석 2003, 163-166).

북한에 대한 세부정책과 북한에 대한 이미지별 네 집단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산분석도 실시하였다. 월드컵 분산개최, 경의선 복원, 장기수 송환, 식량·전력지원, 탈북자 정착지원, 국방비 삭감, 북-미수교, 주한미군 감축 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세부정책에 대한 선호와 네 집단의 성향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민 사이의 갈등은 대체로 보통사람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민족주의자와 현실주의자에 의해 표출된다고 전제하고 이들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특별한 예상이 소요되는 경의선 복원, 식량과 전력지원 그리고 이념적으로 민감한 국방비 증감과 주한미군 문제에서는 현실주의자와 민족주의자 사이에 입장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월드컵 분산개최나 탈북자 지원 그리고 북미수교와 같은 긴장완화와 체제안전, 인도적 문제에 접근에 대해서는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찾아냈다(김태현·남궁곤·양유석 2003, 167-169).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한 내 사회단체 사이의 갈등에 중점을 두고 이념적 차별성을 통일 관련 43개 단체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25개의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을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여 분석하였다(이정희 2002). 설문에 포함된 질문들은 남북교류와 상호주의, 정상회담의 성과 및 영향,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변동 전망, 국가보안법 개폐, 미국 변수, 통일 방안, 대북화해협력정책의 7개 분야로 나누어 대북정책에 대한 설

문을 구성하였다. 표본의 선정에 있어서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7개 단체, 민족회의 10개 단체, 통일연대 12개 단체, 그리고 자통협(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10개 단체로 총 59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으나 이 중에 일부는 중복된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3개 단체를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5개 질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우리사회 내에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단체 사이에 이견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일반여론보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정치지도층의 여론을 분석한 시도라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크며 사회단체의 표방된 이념적 성향과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한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정상회담의 기대와 같은 부분은 특별한 차이가 없거나 이념적으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념적으로 보수단체에 해당하는 자통협, 통일연대 그리고 민족회의의 경우는 대북강경입장을, 그리고 진보단체에 해당하는 민화협은 대북 유화적 입장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희 2002, 124-146).

외교정책과 여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박선원 2002; 이정희 2002; 김태현·남궁곤·양유석 2003)는 국제정치연구에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분석의 대상이 된 대외정책이 대북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범위를 외교정책 일반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여론이 대북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가설은 적절한 추론이지만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무역, 안보, 문화, 기여외교, 기후변화, 인권외교, 핵개발 등 외교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대외정책 일반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론조사가 일반여론과 시민단체의 대표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지만 일반여론과 시민단체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은 연구가 상당정도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학계의 경우 여론 지도층의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여 일반 대중의 선호와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Wittkopf 1990; Hinckley 1992; Chittick, Billingsley and Travis 1995; Holsti 1996).

셋째,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념성향과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지역과 같은 인구통계와의 상관성에 집중되어 있다.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 조사되는 인구통계는 표본을 통제하기 위해서 수집되는 자료인데, 실제로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주요 독립 변수인 것처럼 이용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서, 이는 이론적 비판을 받기 쉽다. 심지어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주요 재판에서 결정에 대한 성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보수적 또는 진보적 결정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기도 한다(Gates 1992; Epstein et al. 2002).

대중이 공유하는 정치의식을 정치문화라고 한다. 서구에서는 세대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를 존중하는 세대(materialist)와 경제적 가치 아닌 다른 가치를 존중하는 세대(post-materialist)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경제적인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와 민

주주의, 환경, 인권과 같이 경제적 성공보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문화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논의가 있었다(Granato, Inglehart and Leglang 1996). 제2차 세계대전 후, 서구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경제적 가치를 존중하는 세대의 정치문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 물질주의세대와 후기물질주의세대로 분리되는 세대현상은 정치문화라고 하는 장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Clarke and Dutt 1991). 이후에 이 연구를 발전시켜 서유럽 7개 국가의 대중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데이터를 합동횡단면(pooled cross-sectional)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집권정당에 대한 지지, 삶의 만족도,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경제 상황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주장하였다(Clarke, Dutt and Kornberg 1993).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사회변화에 대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전국 단위의 선거와 같은 중요한 정치적 사건의 발생과 그 결과가 가지는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결론은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의 일반 여론의 정치체제와 제도에 대한 태도 변화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치문화나 이념성향 또는 인구통계의 함수가 아니라,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 및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진행된 여론조사의 이론적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결과에 있어서 이념성향, 공유된 가치 체계, 지역출신을 포함하는 인구통계의 영향력보다는 거시경제지표로

나타나는 경제 상황의 변화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III. 여론조사 자료와 통계분석 기법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연구는 대부분이 1년을 분석단위로 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변화를 추적하는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형태로 논문이 작성된다.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누적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분석적 논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다수의 기관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언론사가 주관하여 여론조사를 수행한 경우가 대표적인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여론조사는 자료의 지속성과 추적에 있어서 과학적 분석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여론조사의 명칭도 대북정책, 통일정책, 대북인식, 대북의식 등 다양한 용어에 기초하여 실시되었기 때문에 내부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김진환 2015, 73).

본 연구는 내부적 일관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10년 이상의 누적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는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매년 2,000여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면접조사를 여론조사 자료를

추적해오고 있다(박명규·김병로·송영훈·정은미·장용석 2013). 매년 조사에서 설문항의 구성, 용어, 서술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계열 분석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된다.

『통일의식조사』 분석에 사용된 여론조사 자료는 통계청이 제시하는 인구 총 조사에 따른 전국인구현황의 분포에 기초하여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 지역, 연령, 성별을 통제하여 작성하였다. 여론조사 자료에 포함된 연도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나 신뢰수준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최대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pm 2.8\%$ 이내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여론조사 자료가 10년에 걸친 시계열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White Noise 관련 Portmanteau 검증을 실시했으나 자기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필요성” 변수의 경우, Portmanteau (Q) = 1.8673이고 Prob > chi2(3) = 0.6004으로, “통일의 추진방식” 변수는 Portmanteau (Q) = 5.8658이고 Prob > chi2(3) = 0.1183으로, 그리고 “분단 선호” Portmanteau (Q) = 4.2278이고 Prob > chi2(3) = 0.2379으로 모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성이 없는 시계열 자료의 경우, 차분(differentiation) 또는 로그와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일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변수는 (1) 통일의 필요성, (2) 통일의 추진 방식, (3) 통일정책에 만족도, 그리고 (4) 북한에 대한 인식과 같은 변수를 조사하였다.

첫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반반이다”, 그리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 가운데, 본 연구는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의 반응을 추적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측정하였다.

둘째, 통일의 추진 방식에 대한 견해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해야 한다”,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 성숙을 기다려야 한다”, “현상유지” 그리고 “통일에 대한 무관심”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해야 한다”는 적극론을 기준으로 통일의 추진방식에 대한 평가를 추적하였다.

셋째,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만족’, ‘다소만족’, ‘다소 불만족’ 그리고 ‘매우불만족’의 4개의 범주로 응답하였는데 이 중에서 긍정적인 답변인 매우만족과 다소만족을 합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넷째,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 대상’, ‘경계해야 할 대상’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의 5개 범주로 응답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여론의 빈도 변화를 추적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을 제시한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기여도는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통해, 대한

민국 국민의 반응을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같이 4점 척도를 통해 조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의 비율을 측정하여 경험 기여도의 변수로 포함하였다.

우리 국민의 주변국 관계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조사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친밀감을 변수로 포함하였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선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념적 선호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에게 단수의 응답을 요구하여 미국과 중국에 대하여 가장 가깝게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을 조사하여 응답자의 주변국에 대한 선호와 관련한 이념적 선호를 조사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의 변화를 북한과 통일인식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는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에 해당하는 한국의 ‘실업률’과 ‘국내총생산액(GDP: Gross Domestic Product)’을 기준으로 한 경제 상황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특히 청년실업자 및 청년실업률은 연령을 15~29세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지니(GINI) 계수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득 불평등 측정지표인데 0에서 1 사이의 비율로 측정된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의 분배를,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의 분배를 의미한다. 지니계수가 0을 나타내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소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1을 나타내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 1명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는 완전불평등상태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 2015년을 기준(=100)으로 가계소비지출에서 대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1,000분비로 산출, 품목 460개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조사하여 매월 발표한다. GDP를 포함한 경제 관련 데이터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소득」을, 그리고 통계청이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소비자물가지수」를, 그리고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를 각각 활용하여 조사한 내용을 『e-나라지표』를 통해 수집하였다.

북한에 대한 국내 여론의 변화에는 국내 경제 상황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북한의 경제는 경제성장률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북한의 경제 상황이 한국 국내 여론의 대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사회 내부에서는 남북갈등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남남갈등이라고 하는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경제교류에 대해 통일을 위한 투자로 보는 긍정적인 평가와 북한의 군사적 전용가능성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여론의 평가에 북한의 경제사정이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경제사정이 호전되는 과정에 대북 협력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에 대한 조사는 한국은행이 추정치로 조사하는데 이 자료는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정보포털」에서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의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대북지원은 통일부가 내부 행정자료의 형태로 조사한 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 총액을 포함하였고 본 자료는 『e-나라지표』를 통해 수집하였다. 정부와 민간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전달한 지원물품을 화폐

가치로 표시하였다. 지원주체별로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되어 있고, 정부 차원의 지원은 당국 차원, 민간단체를 통한 기금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의 무상지원과 식량차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전체의 총합을 대북지원으로 합산하였다.

대북지원은 민간 차원의 무상지원도 통일부를 통한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지원이라는 전체적 의미에서는 합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북한에 대한 지원으로 적절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의 숫자도 통일부가 매년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을 『e-나라지표』를 통해 수집하였다. 북한이탈 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이들이 국내에 입국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전국 단위의 선거나 영국의 경우, 포클랜드 전쟁의 발생과 같은 주요 정치사건이 여론의 가치판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은 1년 동안 북한당국이 강행한 핵실험을 횡수로 조사하여 표시하였다. 2009년과 2013년에 각각 1회, 그리고 2016년에는 2회, 그리고 그 외의 시기에는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에서 제시한 우리 여론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경제 상황에 중점을 두고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는데 모델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조건이 통일에 대한 가치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경제변수들을 주요 독립 변수로 모델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Unif는 통일정책에 대한 여론의 평가, GDP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pc GDP로, Unem는 한국의 청년실

업 상황, INF는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율, GINI는 소득불평등지수를 각각 나타낸다.

$$Unif = \alpha + \beta_1 GDP + \beta_2 Unem + \beta_3 INF + \beta_4 GINI + \epsilon$$

다음으로 동일한 모델에 정치변수를 포함하여 모델을 다시 설정하였다. 하나의 모델에 모든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사례의 수가 10개인 데 반해서 변수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독립변수 사이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하여 모델의 적절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변수 중 하나를 제거하고 분석을 실행하는 것이다.

$$Unif = \alpha + \beta_1 GDP + \beta_2 Unem + \beta_3 US + \beta_4 CH + \beta_5 Coop + \beta_6 Defc + \beta_7 NKGD + \beta_8 Ncl + \epsilon$$

US와 CH는 각각 미국과 중국을 통일에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여론의 인식, Coop는 남북경협현황, Defc는 탈북자 수, NKGD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그리고 Ncl은 북한의 핵실험을 각각 나타낸다.

IV. 분석의 결과와 논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대중의 다른 이름인 유권자의 의견을 비판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로 여겨진다. 정치가는 물론 이거니와 여론 분석의 전문가 또는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때로는 선거 결과가 선전·선동의 결과이거나 여론의 일시적인 변덕을 말하는 이른바 바람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다수 있지만 결론은 언제나 예외 없이 “유권자는 현명했다”는 판단을 통해 여론의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해 왔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일 및 대북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물론 선거의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여론은 현명했다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핵심은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은 항상 변화해왔다는 것이며,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동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정책에 대한 여론의 평가 또는 반응이라는 점에서 그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의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본 연구의 핵심 연구 질문이다.

알몬드(Almond 1956)와 리프만(Lipman 1949)의 여론과 정책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외교정책에 있어서 여론의 특성이 변덕이 심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서이론(mood theory)에 따르면 여론은 일관된 체계가 없다고 했다. 여론은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이며 개인이 가지는 태도는 인식론적으로 불확실한 구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일

관성이 없고 이런 이유로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은 극히 제한적인 영향력만 행사한다는 주장이다(Holsti 1996, 23-80; 남궁곤 1999). 통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 따르면 시민의 여론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부가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여론의 지지가 따라간다는 인과관계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통일 및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수로 지역출신, 연령, 성별과 같은 고정적인 인구통계변수가 특정한 경향을 형성하는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거시경제상황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과거 어느 진보 정당의 대선후보가 유세과정에서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선거구호를 통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던 것처럼, 대중의 여론이 공유하는 정책적 선호와 지지는 경제적 지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가지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즉 10개의 관측만을 가지고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분석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로바로미터를 이용한 선행 연구에도 분석의 기간은 1976년부터 1986년까지 11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이 경우에는 서유럽의 7개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기 때문에 실제로 77개의 자료를 포함하는 패널자료(panel data)를 활용할 수 있었던 반면에(Clarke, Dutt and Kornberg 1993),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다른 국가를 표본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른 대안으로 국내 여론조사를 광역자치단체별 또는

지역별로 분리하여 패널자료로 재구성할 수 있으나 본 연구가 수행하려는 거시경제지표가 통일 및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경제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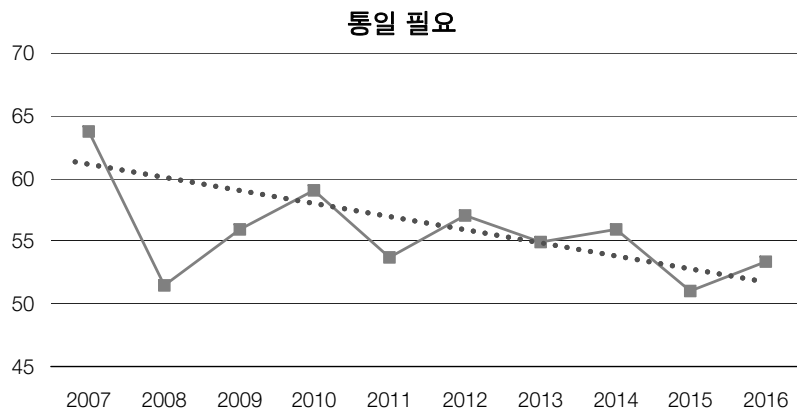
1. 통일 관련 여론의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설명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에 임기를 시작하여 2008년 2월 24일까지, 5년의 임기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추구하였다.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의 구축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문제는 화해협력정책 10년 동안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남북관계가 평화번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보수여론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이던 2007년 10월 4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그 결과 10·4공동선언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정,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 그리고 백두산 직항로 개설과 관광 사업 협력을 통해 비정치·비군사 영역에서 남북협력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 군사·안보 영역으로 확대되는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달성했다. 이런 점에서 2007년 2차 정상회담의 결과는 기능주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된 퇴행적 진행의 가능성과 같은 비관적 전망과 달리 확산효과(spillover)가 극대화될 사례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전망은 통일에 대한 여론의 긍정적 전망으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 10년의 기간 동안 북한에 우호적인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실질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북한 문제를 민족의 특수성이라는 논리보다는 경제 원리에 입각한 보편주의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남북한의 상호실익을 강조하는 호혜적 교류협력을 주장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13년 2월 24일 임기까지 북한을 정상국가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비핵·개방·3000」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추진하면 우리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통해 10년 내로 북한의 1인당 GDP를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성실한 자세를 보이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사실상 진전이 없었고 경제적 교류협력의 차원에서 보면 남북관계는 후퇴하였다.

〈그림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자 비율



남북관계에서 통일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인식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던 2007년에 63.8%를 정점으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서 51.5%로 감소하고 이후 9년의 기간 동안 50%대 초반에 머물러 있었다. 2009~2010년에 소규모 반등이 일어났는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언급한 전제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통일세 등 현실적 대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했던 정책홍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통일정책과 관련한 국내사회의 주요 분야를 교육계, 종교계, 학계, 시민 사회계, 경제계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 4만 명을 대상으로 통일을 준비할 필요성을 홍보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려고 했던 이른바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의 결과로 보인다.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탄핵으로 임기가 종료된 2017년 3월 10일까지 이른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같은 맥락에서 비핵화를 우선 달성하고 후에 남북한 교류협력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대안으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한 사이에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평화정착과 통일기반의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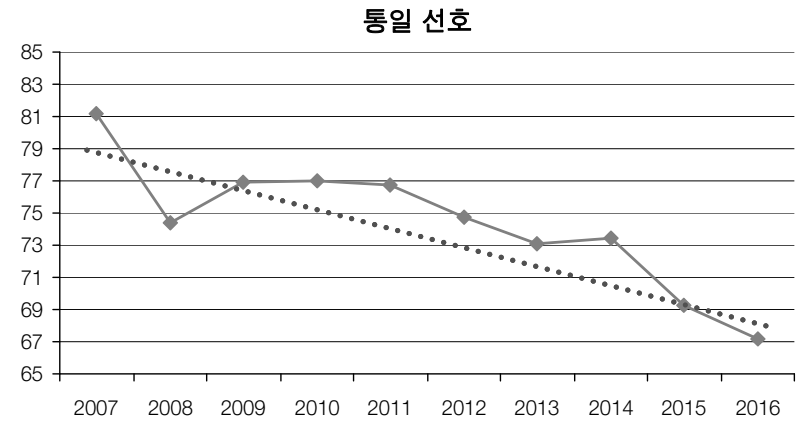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통일대박론’을 발표하고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취임 1주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60%를 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강태호

2014, 3). 뒤이어 2014년 3월 28일, 독일을 방문하여 대북정책 구상을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Dresden Declaration)은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여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제안하였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시아 평화협력구상」, 「통일대박론」 그리고 드레스덴 선언에 이르는 다양한 평화통일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남한이 주도하여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대결 선으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북한의 반응과 달리 국내 여론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1주년을 전후한 2013~2014년에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의 발표를 통해서 국내 여론에 관해서는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추진과 같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소규모 반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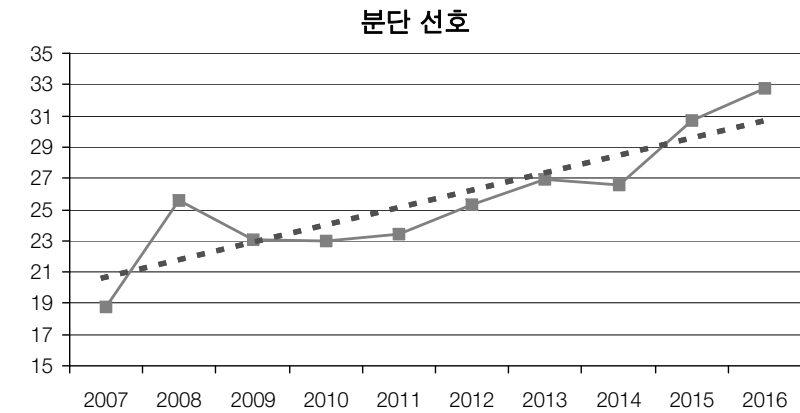
다음으로 통일의 추진에 대한 선호와 분단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는 <그림 2>와 <그림 3>은 정확하게 서로가 대칭하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던 2007년에는 통일의 추진에 대한 선호가 81%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 분단에 대한 선호는 18.8%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통일에 대한 선호는 74%로 하락하고 분단에 대한 선호는 25.6%로 상승한 이후 통일에 대한 선호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그리고 분단에 대한 선호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통일선호에 대한 전반적인 하락추세 속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일어난 2010~2011년 그리고 전체적인 하락의 추세에 2014년 소폭의 반등

<그림 2> 통일의 선호: “가능한 빨리 추진” 및 “장기적 추진”을 선호하는 응답자 비율



<그림 3> 분단선호: “현상유지” 및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선호하는 응답자 비율



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1년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과 2014년 「통일대박론」으로 여론의 주의를 환기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분단의 선호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변화도 동일한 사건으

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논의한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선호, 분단의 선호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결과적으로 여론의 변화가 정부의 정책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변화가 여론의 변화를 형성해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진보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불만이 2009년 2차 핵실험, 2013년 3차 핵실험을 목격하면서 “대북 퍼주기식의 햇볕정책이 결과적으로 핵폭탄으로 돌아온다”며 격분한 보수적인 여론이 다수 존재했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가 가능했다는 설명도 있지만 대북정책의 선호가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권력교체가 되는 주요변수라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한국 정치문화의 특성상 북한에 대한 태도로써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가르는 잣대로 삼아왔으며, 이러한 점에서 북한에 대해 온건한 정책을 선호하는 측 또는 강경한 정책을 선호하는 측으로 정치적으로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집권하는 정당의 행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통일정책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념적 성향을 비판하는 과정에, 유사한 정치적 이념성향을 가진 여론을 대상으로 정책과 이념적 선호가 투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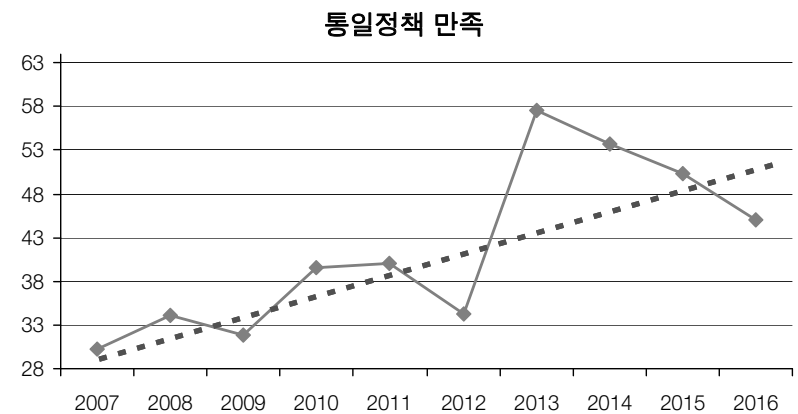
통일정책에 대한 여론의 만족도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에 최저인 30%를 기록한 이후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어졌다. 북한에 대해서 호혜주의 원칙을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대북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에 따른 대북관계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위협과 같은 군사적 도발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데 대한 여론의 비

관적 평가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보다 세부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은 <그림 4>에서처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 통일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이전과 비교해서 상당한 증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경향 가운데 2009년과 2012년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통일정책만족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 그리고 2013년 58%에 해당하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 이후 40% 정도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2009년 5월 25일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는 점에서 당시의 「비핵·개방·3000」정책이 1년 만에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되어서 여론의 부정적인 비판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서 2010년 3월 1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5·24조치는 대북관계의 경색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정책만족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그림 4> 통일정책에 대한 만족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과의 관계정색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의 명목으로 전달되는 식량, 의약품, 비료, 농기계 등에 대해서 국내의 반대여론이 상당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북한은 2011년 12월 19일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2012년에는 김정은으로 권력이 승계되었고 김정은 집권 2년차인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공식적으로 취임하기 직전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취임하는 2013년에는 상당히 높은 정책만족도를 기록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발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여론의 기대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후 지속적인 하락은 신뢰외교(Trustpolitik)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제안하는 드레스덴 선언 등 다수의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제지할 만한 정책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적 평가를 반영한 결과, 지속적으로 정책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 시기 대북정책의 지속적인 만족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중 가장 낮은 2016년(45%)은 노무현 정부 시기 2007년(30%)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통일정책 만족도와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협력의 명목으로 북한에 인도되는 다양한 현금 또는 식량과 같은 현물 제공을 차단하는 경우 통일정책 만족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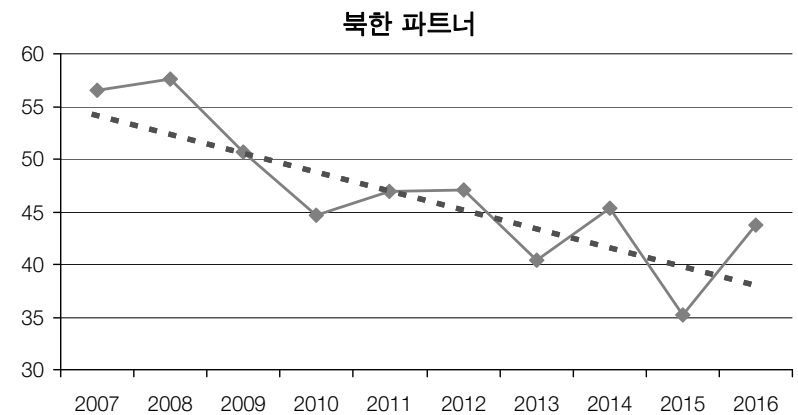
이에 반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도발은 통일정책 만족도를 하락시키는 반면에, 천안함 폭침

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군사적 도발은 통일정책 만족도에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정책 만족도 조사를 통한 해석은 국내 여론이 “대북 퍼주기 식의 햇볕정책이 결과적으로 핵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을 상당히 공유되고 있으며 보수정부의 출범에 따른 북한 문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국내 여론이 북한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조사는 북한을 협력의 상대방, 지원의 대상, 선의의 경쟁자, 경계의 대상 그리고 적대의 상대라는 5개 유형으로 질문했는데 각각의 응답은 정확하게 상호 대칭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을 분석하였다.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여론의 추이는 앞에서 보았던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선호와 유사한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56.6%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08년에 57.6%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

〈그림 5〉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



을 보여주면서 2010년, 2013년 그리고 2015년에 상당한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조사와 달리 보수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긍정적 인식이 2008년에 상승추세로 유지되었던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비핵·개방·3000」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우리정부가 원하는 순서에 따라 북한이 우선 핵을 포기하고 경제협력을 추진하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에 대한 여론의 기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지속된 전반적인 하락세는, 국내 여론이 1년 후인 2009년에 북한이 「비핵·개방·3000」에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군사도발로 인해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급감하고 군사적 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3년의 또 다른 하락세는 2월 12일 단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2008년의 최고치를 보여주는 인식조사와 2016년의 상승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북정책을 발표하면서 「비핵·개방·3000」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높은 기대에 따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서 북한과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상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서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의 상대방으로 인식하는 데는 핵실험과 재래식 군사도발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서 북한과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상승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통일 및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여론이 인식하는 북한 및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는 과정에 중요한 연구 질문으로 생각하였던 주제는 여론의 선호와 정부정책의 상호관계의 방향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이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여론의 선호가 따라가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였다. 앞의 기술통계의 분석에 따르면 통일 및 대북정책은 여론의 변화가 선행하고 이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변화되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 이에 대한 여론의 인식이 후행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여론의 변화의 과정에 남북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이 충격적인 군사적 도발이나 핵 실험 및 미사일 실험과 같이 여론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사건의 발생이 여론의 흐름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통일 관련 여론의 인식에 대한 경제변수의 영향에 대한 분석

통일 관련한 여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세대, 지역, 성별과 같이 이념 또는 가치관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고정적 변인이 아니라 보다 단기적인 정부의 변화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술통계를 통해서 통일여론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되는 변인은 정부 정책의 변화라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가설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일 및 대북정책과 관련한 여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거시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것이다.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본 연구가 가지는 통계학적인 약점을 미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관측한 사례는 10년에 불과한 반면에 이를 설명하려는 독립변수는 너무나 많은, 이른바 “너무 작은 사례와 너무 많은 독립변수(too few cases and too many variables)”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단점은 결과적으로 결정계수 R^2 값이 높아 회귀식의 설명력은 높지만 모델로 설정된 독립변수의 P-value 값이 커서 개별 인자들이 유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독립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관측사례를 포함하는 방법이 있지만 앞서처럼 패널자료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들을 최대한 줄여서 모델을 설정하였다. 거시경제 변수만 포함된 모델을 이러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정치적 상황을 포함한 복합모델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상당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례의 한계로 인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거시경제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있어서 통일의 필요성, 통일 선호, 분단 선호, 통일정책 만족도 그리고 북한을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5개의 종속변수에서 R^2 값은 다중공선성의 영향을 배제하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나왔다. 다만 통일의 필요성이 가장 적절하고 나머지 4개의 종속변수는 높은 R^2 값에 비해서 통계적 유의도가 높은 독립변수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시경제상황이 호전될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반대로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1.24)은 양의 상관계수, 청년실업률(-2.52) 그리고 물가상승(-4.28)은 모두 음의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경제성장이 침체하게 되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률과 물가상승은 높은 수치가 부정적 경제 상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상관계수가 음의 값을 가진다. 청년실업이 증가할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청년실업이 감소할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물가상승도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할수록 서민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물가가 온건한 수준을 유지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 민주주의에서도 정치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로 경제 상황을 지적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indicator)로 국내총생산, 실업 그리고 물가를 지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바뀌어 추진하는 통일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독립변수가 바로 이들 경제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국내총생산, 실업, 물가 모두 비율변수(ratio variable) 형태로 측정되므로 전년 대비 증감을 비율로 표시하고 있어서 측정의 척도는 동일하다.

상관계수의 절댓값에 있어서 물가상승(-4.28), 청년실업률(-2.52) 그리고 경제성장(1.24)의 순서로 나타났다는 것은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물가상승이 가장 민감하고 그다음으로 청년실업과 경제성장의

순서로 적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경제성장이 수출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상승되는 경우에는 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적은 반면에, 물가상승은 서민의 체감경제에 영향이 크기 때문이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서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체감하는 비율이 높은 지표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 높은 상관계수를 가진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의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부의 불평등이 확대될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일을 현상에 대한 변경으로 인식하는 한편,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면 통일이라는 현상변경을 통해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경향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국내 여론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합의에 따른 통일이 아니라 남한이 주도하여 북한을 통합하는 독일식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서독이 동독을 통일하는 과정에 서독의 엄청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통일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해왔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는 경제지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반해서 서독이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막대한 통일비용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유럽의 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된 결과는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남한의 여론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통일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를 개선하여 개인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던 통일대박에 대한 여론의 지지와 일관된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비록 통일대박을 북한의 체제 붕괴와 남한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는 통일정책이라고 비난했지만 국내 여론은 상당한 지지를 보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통일을 통해서 한국경제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가 통일대박론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여론은 통일을 통해서 개인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기대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1>의 두 번째 열에 통일선호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에 있어서 각각의 독립변수에 통계적 유의도는 통일 필요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에 비해서 양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상관계수의 방향과 크기는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의 선호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통일을 하루 빨리 달성해야 된다는 응답과 신중하게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 답변과 관련되어 있다.

<표 1> 통일여론과 거시경제변인의 상관관계

독립변수 \\ 종속변수	통일 필요성	통일 선호	분단 선호	통일정책만족	북한파트너
경제성장	1.24** (0.24)	0.64 (0.45)	-0.64 (0.45)	0.22 (1.49)	-0.09 (0.92)
청년실업률	-2.52** (0.69)	-3.20** (1.28)	3.21** (1.27)	1.49 (4.19)	-1.41 (2.58)
물가상승	-4.28** (0.63)	-1.64 (1.15)	1.66 (1.15)	1.74 (3.77)	-0.77 (2.32)
지니계수	713.94** (122.69)	418.19* (225.98)	-420.85* (224.69)	-1445.11* (738.82)	952.39* (455.19)
상수	-137.15** (38.39)	-26.19 (70.70)	126.91 (70.31)	468.50 (231.17)	-231.98 (142.43)
	R ² =0.94 Adj R ² =0.90	R ² =0.83 Adj R ² =0.71	R ² =0.84 Adj R ² =0.71	R ² =0.69 Adj R ² =0.45	R ² =0.77 Adj R ² =0.59

경제성장은 통일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실업과 물가상승은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모델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준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통일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의미하는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선호와 달리 분단의 선호는 통일을 반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종속변수이다. 여기서 나타난 바는 앞의 두 모델과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분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경제 상황이 개선될수록 분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3.21)이 통계적 유의도가 가장 높고 상관계수가 가장 높다는 것은 실업이 증가할수록 분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도는 충족되지 않았지만 물가상승(1.66) 그리고 경제성장(-0.64) 상관계수의 방향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니계수(-420.85)는 통계적 유의도도 높고 상관계수도 높으며 앞의 설명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이 개선될수록 분단에 대한 선호는 감소하는 것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악화될수록 분단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개선될수록 여론은 통일을 기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감소하고 현상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일정책의 만족도와 북한을 협력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경향은 통계적 유의도를 충족하는 독립변수가 지니계수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독립변수의 경우에도 상관계수의 방향에도 일관성이 부족하여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의

논의를 전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3. 통일 관련 여론의 인식에 대한 정치변수의 영향에 대한 분석

경제적 변인뿐 아니라 정치적 변인이 통일 관련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의 필요성, 통일선호, 통일정책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변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변수는 경제성장과 청년실업률만 통제변인으로 포함하고 다른 정치 관련 변인을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R²값이 높아 회귀식의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제시한다. <표 2>에 나타난 결과는 경제변인만을 포함한 <표 1>의 결과에 비해 설명력에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탈북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 유의도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경제성장(4.00)과 실업(-7.16)은 위의 모델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성장이 개선될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모델에서도 경제성장보다 실업이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경제성장보다 실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국가별 선호에 있어서는 미국을 선호(-1.83)하는 여론과 중국을 선호하는 여론(4.62)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정치에서 미국을 선호하는 여론이 보수적인 성향을, 그리고 중국을 선호하는 여론이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수지지 여론은 통일의

(표 2) 통일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변수의 분석

독립변수\종속변수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선호	통일정책 만족도
경제성장	4.00** (0.27)	2.53** (0.14)	2.42 (0.53)
청년실업률	-7.16* (0.68)	-7.97** (0.35)	-11.98* (1.34)
미국선호	-1.83** (0.13)	-1.31** (0.07)	1.70* (0.25)
중국선호	4.62* (0.43)	3.76** (0.22)	4.38 (0.83)
대북지원	-0.02* (0.001)	-0.01** (0.0007)	-0.03 (0.0025)
탈북자	-0.002 (0.0003)	0.002** (0.0001)	0.00004 (0.0006)
북한경제	-5.89** (0.41)	-4.84** (0.21)	-0.588 (0.79)
핵실험	10.35** (0.72)	6.57** (0.37)	3.83 (1.40)
상수	208.41** (10.35)	187.99** (5.32)	-17.93 (20.23)
	R ² =0.99 Adj R ² =0.98	R ² =0.99 Adj R ² =0.99	R ² =0.99 Adj R ² =0.99

필요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에 진보지지 여론은 통일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지원(-0.02)과 북한의 경제 상황(-5.89)은 상관계수가 음수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증가할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여론은 미약하지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의 공감대는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에 보내준 지원에 대해 “대북 퍼주기식의 햇볕정책이 결과적으로 핵폭탄으로 돌아온다.”며 격분한 보수적인 여론이 상당수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일관된 결과라고 판단되고 북한당국도 경제가 개선된다고 해서 그 재원이 북한 주민의 삶의 개선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다는 인식이 국내여론에 상당히 공유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북한의 핵실험(10.35)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수록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의미하고 국내여론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통일이라는 인식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내 여론이 공유하는 통일에 대한 비전이 남한이 주가 되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독일식 통일을 전제로 한다면 북한 핵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안이 통일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의 선호 변수도 앞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통일의 선호에 대해서도, 경제성장(2.53)과 실업(-7.97)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성장보다 실업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선호에 있어서 보수적 성향을 의미하는 미국 선호(-1.31)와 진보적 성향을 의미하는 중국 선호(3.76)가 앞의 모델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진보적인 여론은 통일의 선호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보수적인 여론은 통일의 선호에 있어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북지원(-0.01)과 북한의 경제 상황은(-4.84)은 상관계수가 앞의

V. 결론

모델과 마찬가지로 음수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수록 통일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획득하는 경제재원이 북한 주민의 삶의 개선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다는 인식이 국내 여론에 상당히 공유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

북한의 핵실험(6.57)은 통일의 선호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통일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의 공감대가 상당히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흥미로운 결과는 탈북자(0.002)가 통계적 유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탈북자가 증가할수록 통일에 대한 여론의 선호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국내 여론을 환기시켜왔다는 점에서 국내 여론은 탈북자의 증가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일을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2〉의 마지막 열에 나타난 통일정책의 만족도는 높은 결정계수 R^2 값에 비해 통계적 유의도가 높은 독립변수가 적은 전형적인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된 국가에서 여론의 변화는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최고의 관심거리가 되어왔다. 이와 함께 정치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여론의 성격에 대해 논란을 전개해왔다. 정서이론(mood theory)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론은 불안정하고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일관된 체계가 없기 때문에 외교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여론의 변화에 대한 논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형성된 이념적 성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변화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상당히 연계되어 있다. 여론이 장기적인 특성에 따라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의 지표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여론에 대한 정서이론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론의 영향력에 있어서 인과관계도 여론이 정책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여론의 방향을 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선호를 추적하여 그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변화는 정부의 통일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통계분석을 통해서 통일 및 대북정책의 변화는 거시경제지표의 함수이자 정치적 정책의 선택의 변화 그리고 핵실험과 같은 중요한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하였다. 통일 및 대북정책은 장기적인 이념이나 가치관에 따

■ 참고문헌 ■

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사건의 발생과 정부의 정책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바뀌어 새로운 통일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통계학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례는 숫자가 적고 변수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분석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통계학적 정의에 따르면 30개의 관측이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는 데 최소의 요구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20년의 여론조사 자료를 기다려야 한다면 2036년이 되면 적절한 분석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 전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처한 상황이 악화일로로 걷는 상황에서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실증적 이해가 필요한 만큼 통계학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연구결과라 하더라도 제한적이거나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는 여론의 성격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중요하지만 한반도라는 특수상황에서 통일과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에도 의미를 두고 분석과 논의를 전개하였다. 앞으로 국내 여론의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계속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 및 대북정책의 수립에 적절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 강태호. 2014. “통일대박론과 평화프로세스의 부재.”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EAF PF 제1호. 서울: 동아시아재단.
- 길윤희.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잘한다 76%.” 『한겨레신문』 2013년 6월 23일.
- 김진환. 2015. “기획 특집: 광복, 분단 70년 그리고 통일: 남한 국민의 대북의식과 통일의식 변천.” 『현대사광장』 6집. pp.72-93.
- 김태현·남궁곤·양유석. 2003. “외교정책 신념체계와 국가 이미지에 관한 실증 사례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7집 3호. pp.151-174.
- 남궁곤. 1999. “외교정책과 여론: Almond-Lippmann Consensus와 그 비판적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15권 1호. pp.31-64.
- 동아일보. “한국인 北韓—中—蘇 적대감 크게 줄었다 東亞日報 朝日新聞 실시 韓-日 공동 여론조사.” 『동아일보』 1990년 8월 1일 10~11면.
- _____. “한반도 통일가능—한 61%, 일 42% 東亞日報 朝日新聞 실시 韓-日 공동 여론조사.” 『동아일보』 1990년 8월 1일 1면.
- 박선원. 2002. “햇볕정책과 여론: 지속성과 변용의 관점에서 본 실증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18권 2호. pp.135-166.
- 박창희. 1993. “대학생의 충격적 역사관: 누구의 책임인가 1.” 『한국논단』 제 46권 1호. pp.26-36.
- 배혜림. “대북정책 강경, MB정부-朴정부 順.” 『동아일보』 2014년 10월 13일.
- 이민혁. “통일연구원 김대중-노무현 대북정책, 이-박 대북정책보다 선호도 높아.” 『유코리아 뉴스』 2017년 8월 9일.
- 이정희. 2002. “통일관련 사회단체의 이념적 차별성 연구: 남북관계와 대북정

책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2집 4호. pp.117-149.

최진욱. 2010. “국민들의 대북인식 변화와 대북정책 평가: 국민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KINU 학술회의총서 10-01. 서울: 통일연구원. pp.3-41.

통일부. 1999. 『통일부 30년사』. 서울: 통일부.

홍영립. “[노무현 정부 4년 평가] 부패 줄어 긍정평가 42%.” 『조선일보』 2007년 2월 21일.

Almond, Gabriel A. 1956. “Public Opinion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Public Opinion Quarterly*, Vol.20, No.2. pp.371-378.

Chittick, William O., Keith R. Billingsley, and Rick Travis. 1995. “A Three-Dimensional Model of American Foreign Policy Belief.”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39, No.3. pp.313-331.

Clarke, D. Harold, & Nitish Dutt. 1991. “Measuring Value Change in Western Industrialized Societies: The Impact of Unemploy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5, No.3. pp.905-920.

Clarke, D. Harold, Nitish Dutt, and Allan Kornberg. 1993. “The Political Economy of Attitudes toward Polity and Society in Western European Democracies.” *Journal of Politics*, Vol.55, No.4. pp.998-1021.

Epstein, Lee, Jeffrey A. Segal, and Jennifer Nicoll Victor. 2002. “Dynamic Agenda Setting on the U.S. Supreme Court: An Empirical Assessment.” *Harvard Journal on Legislation*, Vol.39, No.2. pp.395-433.

Gates, John B. 1992. *The Supreme Court and Partisan Realignment: A Macro — and Micro-level Perspective*. Boulder, CO: Westview Press.

Granato, Jim, Ronald Inglehart, and David Leblang. 1996. “Cultural Values, Stable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A Repl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0, No.3. pp.680-696.

Hinckley, Ronald H. 1992. *People, Polls, and Policy-Makers: American Public Opinion and National Security*. New York, NY: Lexington Books.

Holsti, Ole R. 1996. *Public Opin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Lippmann, Walter. 1949. *Public Opinion*. New York, NY: Free Press.

Wittkopf, Eugene R. 1990. *Face of Internationalism: Public Opin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국문

통일여론조사 연구에 따르면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선호도는 정권교체에 따라서 변화하는 반면에 대북정책에 대한 강경과 온건의 평가는 상당히 고정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대북 및 통일정책의 선호의 변화에 대해서 연령, 성별, 지역, 학력, 소득과 같이 고정적인 형태를 지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주의세대와 후기물질주의세대로 분리되는 세대 현상은 정치문화라고 하는 장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한국인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존의 인구통계적 변수인 지역, 연령, 성별보다는 거시경제지표가 설득력 있는 독립변수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여론조사 자료를 축적해온 『통일 의식조사』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로써 경제성장, 실업률, 물가상승, 지니계수를 모델에 포함시켰는데, 분석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경제 상황이 개선될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통일의식, 여론조사, 시계열 분석, 정치문화, 정서이론

• 영문

Previous studies about reunification survey have demonstrated that public preference on the Korean reunification has oscillated with the succession of new regimes despite a certain ideological outlook shared among the general public. This study criticizes the argument that public preference on reunification is a function of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gender, location, education, and income level. Since these variables are fixed, they cannot explain the variances in the reunification survey.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phenomenon that separates the materialist and post-materialist generations influencing political decision-making is not a result of the long-term generation effect called political culture, but rather a response to a short-term macro-economic situ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hypothesis that macroeconomic indicators are more persuasive independent variables than the existing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region, age, and sex. I conducted a time-series analysis using the “Unification Awareness Survey” which accumulated the data over 10 years from 2007 to 2016.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increases as the economic situation improves and vice versa.

[Key words] Unification consciousness, Opinion survey, Time series analysis, Political culture, Mood theory



2017 제주포럼에 나타난 역내 엘리트의 인식

한인택 |
제주평화연구원 평화협력연구부장

1. 서론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서 2001년에 시작되었다. 제1회 포럼부터 제5회 포럼까지는 ‘제주평화포럼’이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었고, 2011년 제6회 포럼을 계기로 현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명칭의 변경은 주제의 다양화와 규모의 확대를 반영한 것으로, 명칭의 변경 이후 제주포럼에서는 평화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지역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게 되었다. 2012년 제7회 회의부터 제주포럼은 매년 개최되는 연례 포럼으로 발전하였다. 2012년 제주포

럼의 연례화가 공식화되기 전까지 제주포럼은 격년제로 개최되었고 개최일자도 매년 가변적이었다. 2012년을 계기로 제주포럼은 지금과 같은 규모와 성격의 회의로 제도화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제주포럼에는 4개 전체 세션(plenary session), 71개 동시세션(breakout session)에 79개국에서 온 5,534명이 참석하여, 이제 제주포럼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종합포럼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제주포럼은 단독 유일한 행사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개최되기 시작한 아태지역 내 무수한 안보대화 중의 하나이다. 아태지역의 대표적 다자안보대화라고 할 수 있는 ASEAN Regional Forum의 1차 회의가 1994년에 열렸고, 1997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지역협력에 관한 다자대화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 제주평화포럼이 처음 개최되었고, 그 다음 해인 2002년에는 (다자안보대화는 아니지만) 중국의 Boao Forum for Asia와 영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싱가포르 정부와 협력해서 개최하는 Shangri-La Dialogue가 시작되었다.¹⁾

1997년 하반기에서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에 개최된 역대 다자안보대화를 관찰해온 한 연구에 따르면, 1998년 한 해 동안 Track 1 다자

1) 이 시기의 역대 다자안보협의의 현황과 추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가 있다. 배극찬, “ASEAN의 아태지역 다자안보구상과 전망,” 『동남아시아연구』 2권 2호(1993); 이서향,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협력의 모색: 한국의 입장,” 『지역연구논총』(1993); 이서향,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의 현황과 전망,” 『주요국제문제 분석』(1997.08.06); 이서향,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실태분석과 평가,” 한용섭 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나남출판, 2005); 이서향, “NEACD 추진실태 및 향후 전망”(발간연도 미상); 한인택, “아태지역 안보대화의 평가와 의의: Track 2 다자안보대화를 중심으로,”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안보대화는 총 11회, Track 2 다자안보대화는 총 34회 개최되었으나, 2008년에는 Track 1 대화가 245회, Track 2 대화가 269회가 개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²⁾ 1998~2008 기간 중에 Track 1 대화는 22.3배, Track 2 대화는 7.9배 증가한 것이다.

다자안보대화의 활성화에는 우리나라도 기여하고 있어서, 제주포럼 외에도 ‘동북아평화협력 포럼’이나 ‘서울안보대화’ 등이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외에 한국에서 유치한 국제적 다자안보회의 — 핵안보정상회담이나 사이버스페이스총회 등 — 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다자안보회의는 더 많다. 다만 어떤 회의들은 1회성 행사이고, 참가자 간에 얼마나 실질적인 대화와 토론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다자안보대화라고 분류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경우가 있다.

냉전이 종식되고 ASEAN Regional Forum이 처음으로 개최되기 이전까지 아태지역은 다자안보대화가 거의 없었던 지역이었다. 이는 놀라운 현상이 아니다. 냉전이 끝나기 전까지 아태지역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였으며, 월남전과 같은 국제적 분쟁도 발생하였

2) Dialogue and Research Monitor (前 Dialogue Monitor). 이 자료는 1994년 캐나다의 연구자들 — Paul Evans, Shirely Yue, 그리고 York대학과 British Columbia대학 연구팀 — 이 아태지역 다자대화와의 연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하면서 처음 만들어졌고, 1998년부터는 Paul Evans가 이끄는 British Columbia 대학 연구팀과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가 공동으로 데이터 구축작업에 참여하다가, 이후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가 단독으로 작업하였고, 2008년을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이 중단되었다. 1997년 하반기부터 2008년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DRM이 현재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어 있다.

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다자안보대화는 꿈꾸기 어려웠다. 냉전의 종식을 기점으로 아태지역에서 다자안보대화가 개최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각국에서 수많은 다자안보대화가 개최되고 있다.

왜 아태지역은 다자안보대화에 열중하는 것일까? 아태지역 중 동남아의 경우는 냉전의 종식 이후 냉전기의 양극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지역 질서를 같이 논의할 필요성이 생겼고, 대안적 지역질서를 찾기 위해 다자안보대화가 활성화되었다. 동남아에서 다자안보대회는 다자안보협력을 보완하고 경우에 따라서 견인하였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맥락에서 다자안보대회를 추진하고 있다.³⁾ 현재 동북아에서는 군비증강이나 군사동맹에 의존한 기존의 안보 제도와 전략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중 간 세력전이와 중일 간 영토갈등이 심화되고 남북 간 대립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기존의 안보 제도와 전략은 ‘안보의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불신을 낳아서 동북아 지역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은 그동안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억지하는 데에 효과적이었으나, 핵공격이나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위협을 억지하는 데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여 배치한 THAAD는 의도와 달리 미중 간, 그리고 한중 간 안보의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방어적 목적의 조치를 취하였지만 상대방은 공격적으로 인식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3) 이와 아울러 중요한 국제회의를 소집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의 소프트파워도 제고하려는 우리나라의 적극적 중견국 외교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안보 패러다임을 보완하거나 나아가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동북아는 원래 다자협력의 전통이 약한 데다가 안보분야에서 다자협력은 특히나 어렵다. 복잡한 양자관계, 다자안보협력 전통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정부대표들이 만나서 협력에 합의를 하고 곧바로 실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자안보대회를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Track 1 대화뿐만 아니라 Track 2 대화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처음에는 민간인과 사적 자격으로 참석하는 정부 인사들이 모여서 대화부터하고 합의나 실천은 때가 올 때까지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가피하다. 지난 정부의 정책을 예로 들자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택하였다. 만약 동북아에서도 동남아처럼 다자안보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다자안보대회는 궁극적으로 다자안보협력으로 발전할 것이다. 물론 동북아가 꼭 동남아와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우리와 지리적, 문화적, 그리고 시기적으로 먼 유럽의 다자안보협력경험보다는 가까이 있는 동남아의 다자안보협력 경험이 주는 함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⁴⁾

제주포럼은 Track 2 내지 Track 1.5 대화로서, 그간 12회나 개최되

4) 이상의 내용은 필자의 지론으로, 필자의 다른 논문이나 발표를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하였다. 한인택,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의의와 실현방안,” 『JPI 피스넷』(2014); 한인택, “동남아 Track 2 외교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함의: ASEAN ISIS의 역할을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2014).

었고 세션의 수도 한 해에 60, 70개에 이르고 있다. 각 세션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정책결정자,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여 평화와 번영에 관련한 주제를 놓고 각자의 생각을 밝히고 의견을 교환하여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는 제주포럼이 중요한 다자안보대화 자리 잡았다고 판단하고, 제주포럼을 통해서 역내 주요 정책결정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제주포럼의 결과 자료(기조연설, 세션주제, 세션 논의 내용)를 통하여 아시아의 정책결정자와 민간전문가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⁵⁾

II. 연구의 방법론

대개의 인식조사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국민들이 전보다 정책결정에 관심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과거와 달리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이해하고 필요하면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가 최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 달리 국제관계에서는 일반국민보다 정책결정자와 전문가들의 인

5) 제주포럼의 결과에 대한 분석은 작년에 처음으로 다음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인택, “제주포럼을 통해 본 평화와 협력에 관한 역내 엘리트의 인식,” 『2016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제주평화연구원, 2016). 본 연구는 2016년 연구와 문제의식이나 방법론을 공유하며, 2017년 제주포럼의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이전 연도의 결과와 비교한다.

식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북한의 외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생각을 아는 것보다 북한 고위권력자의 생각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중을 상대로 한 인식조사에 추가해서 엘리트의 인식을 조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접근성 때문이다. 제주포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정책결정자와 전문가는 물론 국제기구의 임직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엘리트가 갖고 있는 인식을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역내 엘리트가 얼마나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떤 개념을 통하여 사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주포럼의 결과자료집을 분석한다.

1. 제주포럼 결과자료집

매 제주포럼의 대주제는, 제주평화연구원이 내부 협의와 외부 자문을 통해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관련된 주제로 선정하고, 포럼에 참가하는 전·현직 국가정상급 인사들에게는 선정된 주제에 관하여 기조연설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왔다. 기조연설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조연설자들끼리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주최 측이 기조연설자에게 특정한 내용을 언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조연설에는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기조연설자 각자가 갖는 생각이 자유롭게 담기게 된다. 또 매 제주포럼에서는 수십 개의 개별 세션이 개최되는데, 일부의 세션은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직접 기획하지만 대다수의 세션에서는 포럼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들이 각각 자기가 정한 주제를 다루게 된다.

즉, 매년 열리는 포럼에는 그해에 포럼의 초점이 되는 대주제가 있고, 대주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기조연설자와 세션 개최 기관과 단체가 자유롭게 각각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관심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제주포럼이 끝나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있다.

제주포럼의 대주제는 매년 변화하여 왔고, 기조연설자를 포함한 참가자들은 대주제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생각을 밝혀왔다. 이렇듯 기조연설자와 각 세션참여기관이 대주제와 관련하여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기조연설의 내용과 세션의 주제로 정하기 때문에 제주포럼의 결과자료는 제주포럼의 시작 이래로 역내 엘리트의 인식과 관심사가 어떻게 진화하여 왔고, 어떤 유사성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 제주포럼의 기조연설문의 분석을 통해서 같은 대주제에 대한 기조연설자들의 생각, 특히 다양성과 공통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2017년 제주포럼의 대주제는 “Sharing a Common Vision for Asia’s Future”이었고, 2016년 제주포럼의 대주제는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이었다. 기조연설자의 연설문은 각국의 전·현직 국가정상급 인사들이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나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에 관하여 갖고 있는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같은 주제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밝힌 것은 기조연설자뿐만이 아니다. 2017년의 경우에는 “Sharing a Common Vision for Asia’s Future”

에 대해서, 전·현직 국가정상급 인사들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현직 주한 대사들은 좌담회를 통해서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2016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여서 대주제인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에 대해서, 전·현직 국가정상급 인사들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현직 주한 대사들은 좌담회를 통해서, 학자들은 학술세션을 통해서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이 결과, 전·현직 국가정상급 인사, 현직 외교관, 그리고 연구자라는 각기 다른 역할과 위상에 따라 생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이 연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주요 연설문의 경우는 결과자료집에 전문이 수록되지만 세션에서 발언한 내용은 요약되어 결과자료집에 포함된다. 일부 세션의 경우는 발언자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논의된 내용들을 수렴하여 하나로 요약하기도 하였지만, 대개의 경우는 발언자별로 발표나 토론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다. 따라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적은 다른 참가자들의 생각의 유사성과 상이성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집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제주포럼이 아태지역 내 다른 다자 안보대화와 비교해 갖는 공통성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동일한 주제를 놓고 각자의 역할이나 국적에 따라 발생하는 생각의 차이, 그 반대로 역할이나 국적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인식의 공통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인식조사는 보통 응답자가 질문지에 있는 여러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은 숫자로 코딩되기 때문에 통계분석을 통한 정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서 제주포럼 결과자료집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text)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이 어렵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예전에는 연구자가 결과자료집을 꼼꼼하게 읽고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나 자료가 축적되고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는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다행히 요즘에는 문서자료 분석 소프트웨어가 발달해서 문서자료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산 언어학(computational linguistics)용으로 개발된 오픈소스 질적 분석 프로그램인 KH Coder를 사용하여 제주포럼의 결과를 분석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문서자료의 분석은 유용하지만 한계가 많다. 많은 양의 자료를 단시간 내에 검색할 수 있게 해주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발견하기 힘든 관계나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어 유용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AI가 더 발달하고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text mining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잘 사용해야 좋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지, 단지 비싼 장비와 복잡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좋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자료의 구조와 성격에 대해 잘 이해하여야 하고, 연구설계나 연구질문이 적절하여야 한다.

III. 제주포럼의 대주제와 세션의제

아태지역의 안보와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련된 다자대화과 연구를 모니터링하여, 명칭, 주최자, 참가자, 장소, 일시, 주제(theme), 의제(agenda)를 기록하여 놓은 방대한 자료인, Dialogue and Research Monitor(DRM)에 따르면, 아태지역 다자안보대화에서는 다루는 안보의 개념이 다양화되었다고 한다. 군사안보 중심의 전통안보뿐만 아니라 인권, 보건, 환경, 성장, 기후변화 등의 문제들도 비전통적 안보 문제로서 인식되게 되었고, 안보의 주체도 전통적인 ‘국가’에서 ‘인간’으로, 나아가 ‘지구(환경이나 기후변화의 경우)’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제주포럼은 역내 “전형적” 다자안보 대화에 비해서 다루는 주제와 지역에 있어서 차별성을 지닌다. 제주포럼의 초기에는 다자안보 협력과 한반도가 양대 주제였고, 대형 종합포럼으로 변신한 후에도 지역은 확장되었지만, 핵 문제를 제외한 전통 안보 문제, 환경 문제를 제외한 비전통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고 있다.

포럼 대주제를 보면 2007년까지는 ‘동북아’ 내에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고 유럽(OSCE/CSCE) 방식의 다자안보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으나, 2009년에는 지역적 범위가 ‘동아시아’로 확장되었고, 2011년부터는 다시 ‘아시아’로 확대되었다.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을 지향하면서 2011년에는 이름을 ‘제주평화

〈 제주포럼 대주제 〉

- 2001. Building Common Peace &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 2003. Building a Northeast Asian Community: Challenges and New visions
- 2005. Building a Northeast Asian Community: Towards Peace and Prosperity
- 2007. Peace &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Exploring the European Experience
- 2009. Shaping New Regional Governance in East Asia
- 2011. 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 2012. New Trends and the Future of Asia
- 2013. New Waves in Asia
- 2014. Designing New Asia
- 2015. Towards a New Asia of Trust and Harmony
- 2016.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
- 2017. Sharing a Common Vision for Asia's Future

* 2007년 이후 포럼부터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

** 2011년부터 '제주평화포럼'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포럼화

***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연례포럼화

포럼'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바꾸며 '대형 종합포럼'으로 변신한 이후로는 대주제가 내용적으로도 포괄적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제주포럼에서 기존의 외교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경영, 사회문화 교육, 지역발전 등의 다양한 의제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하고도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주제만을 보면 제주포럼에서 다루는 구체적 이슈들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제주포럼의 구체적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션의제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또한 쉬운 작업이 아니다. 제주포럼이 대형 종합포럼으로 성장한 이후 세션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 '제주평화포럼' 세션 제목(2007년, 2009년)⁶⁾

〈표 1〉은 2007년, 2009년 개최된 제주포럼(당시는 '제주평화포

〈표 1〉

■ 2007년·2009년

단어	총 빈도	단어	총 빈도
Asia	17	prospects	3
Northeast	15	Century	2
Cooperation	9	City	2
Community	6	Crisis	2
East	6	Economic	2
Building	5	Human	2
Future	5	Leaders	2
Jeju	5	Management	2
Korea	5	Nuclear	2
Security	5	Perspective	2
Asian	4	Politics	2
Financial	4	Process	2
Global	4	Regional	2
International	4	Roundtable	2
New	4	conflict	2
Peace	4	diplomat	2
history	4	journalist	2
Branding	3	korean	2
Multilateral	3	prosperity	2
Nation	3	roundtable	2
World	3	session	2
issue	3	shape	2

6) 이 부분은 2016년 연구에 있는 내용이나 2017년 세션 제목을 분석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함시켰다. 한인택, "제주포럼을 통해 본 평화와 협력에 관한 역대 엘리트의 인식," 『2016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제주평화연구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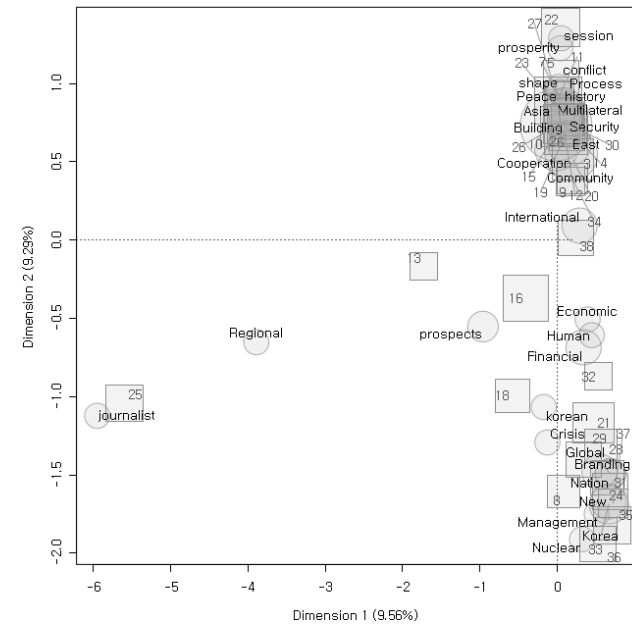
럼)의 개별 세션 제목에 2번 이상 사용된 단어와 그 빈도를 표시한 것이다.

Asia와 Northeast가 각기 17회, 15회 사용되어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cooperation, Community, East가 각기 9회, 6회, 6회로 많았다. 한편 peace는 4회, security는 5회 사용되었고, nuclear, conflict, Korean이 각기 2회 사용되었다. 세션 제목에 사용된 단어만을 놓고 보면 제주포럼(제주평화포럼)이 (1) 핵 문제 외의 안보 이슈는 다루지 않고, (2) 금융이라든가 브랜딩 같은 경제경영 이슈가 다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아래서 국가브랜드 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사용하는 단어와 그 빈도의 분석만으로는 제주포럼의 관심이나 대략적 방향을 파악하는 데 아주 초보적인 단서만 제공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차트 1〉은 문서자료를 분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KH Coder를 사용해서 2007년과 2009년 세션 제목을 분석한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문서자료 분석은 대량의 문서자료를 순식간에 분석하여 관심사안, 핵심 개념, 논리구조 등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분석이 “객관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고,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개연성도 높다.

세션 제목에 사용된 단어들을 분석하여 단어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 차트에 따르면, 2007년과 2009년 제주포럼에서는 크게

〈차트 1〉



2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온다. 우선, 우측 상단부에는 multilateral, cooperation, community, building, peace, security, conflict, process 등의 단어들이 집중되어 위치하고 있다. 이들이 밀집하여 위치한 것은, 2007년과 2009년 제주포럼에서 다자안보협력과 공동체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차트를 사용하여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한국 문제 — branding, crisis, nuclear — 가 제주포럼의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이다. 밀집하여 있는 단어의 수가 적고, 단어와 단어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먼 것을 보면, 2007년, 2009년 제주포럼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국 문제보다는 다자안보협력과 공동체 구축이 더 중요한 주제였고, 한국 문제에 관한 논의는 핵 문

제에서부터 국가브랜딩까지 다루면서 초점이 분산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과 2009년 제주포럼의 경우에는, 제목에 사용된 단어와 빈도 분석, 그리고 대응분석 차트를 통해서 볼 때 안보개념의 다양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세션 제목에는 다자, 협력, 공동체, 구축, 평화, 안보, 갈등, 프로세스 등 전통적인 안보협력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중심이고, 환경, 테러, 인간안보, 전염병 등의 새로운 이슈는 세션 제목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물론 비전통 안보 이슈들이 세션 중에 토의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비전통 안보 이슈를 세션 제목을 내걸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 차트를 통해 알 수 있는 다른 사실은, 당연한 얘기이지만 제주포럼에서 한국 문제가 중요한 주제라는 점이다.

제주포럼의 이러한 특징은 안보개념의 다양화나 글로벌 이슈의 부상 등의 최근 추세와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지만, 2007년, 2009년 제주포럼이 다른 포럼에 비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견지한 증거이기도 하다. 2007년, 2009년까지 제주포럼은 소규모 회의로서, 지역다자안보협력의 증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선택과 집중”하는 다자안보대화였기 때문이다. 안보개념의 다양화 등 이슈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제주포럼이 대형화, 종합화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2.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세션의제(2017년)

2011년부터 제주포럼은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표 2〉

■ 2017년

단어	총 빈도	단어	총 빈도
Asia	28	Relations	4
Cooperation	13	role	4
Future	12	Role	4
Korea	12	Security	4
China	9	asian	3
Jeju	9	Community	3
New	9	Development	3
East	7	Global	3
challenge	6	government	3
Northeast	6	Industrial	3
Peace	6	Japan	3
City	5	Leadership	3
korean	5	local	3
North	5	Nuclear	3
South	5	Pacific	3
Trump	5	Rights	3
ASEAN	4	Sea	3
International	4	sustainable	3
Korean	4	think	3
Regional	4	Women	3

대형 “종합포럼”으로 변모하였다. 2017년 제주포럼의 대주제는 “Sharing a Common Vision for Asia’s Future”으로 전체 세션 4개, 동시세션 71개로 구성되었으며, 79개국 5,534명이 참가한 명실상부한 대형 종합포럼으로 자리 잡았다.

〈표 2〉는 2017년 포럼의 세션 제목에서 3회 이상 등장한 단어의 리스트이다.

앞에서 2007년과 2009년 세션 주제를 분석하였을 때 Asia와 North-east가 각기 17회, 15회 사용되어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cooperation, Community, East가 각기 9회, 6회, 6회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eace는 4회, security는 5회 사용되었고, nuclear, conflict, Korean이 각기 2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7년 세션 제목에서는 Asia가 28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다음으로 Cooperation이 13회, 대주제에서도 사용된 Future가 Korea와 함께 12회 사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2009년이나 지금이나 제주포럼이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협력을 증진하는 취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다음이다. 2017년에는 China와 Jeju가 각기 9회 사용되었는데, 앞에서 살펴본 2007년/2009년 표에서는 China는 없었고, Jeju만 5회 사용되었다. 10년 사이에 중국의 위상이 증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은 제주포럼이 대형화, 종합화되면서 중국과 관련된 주제까지 다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위상 증대와 포럼 성격의 변화 둘 다 개연성이 있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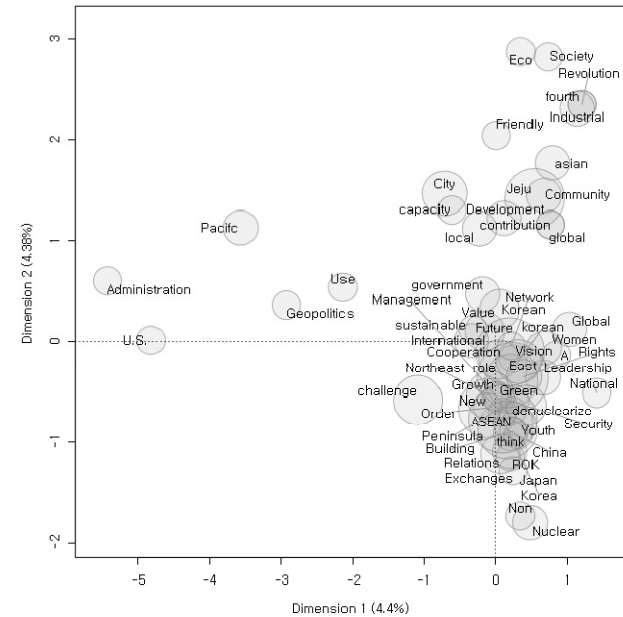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Trump(총 5회)와 ASEAN(총 4회)의 등장이다.⁷⁾ 이 두 단어는 2016년까지는 한 번도 세션 제목에 사용된 적이 없었다. (2016년 동시세션 토의 중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트럼프가 언급

7) ASEAN이라는 단어가 세션의 설명과 세션의 제목에 중복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복으로 계산되었다. 예를 들어서 ASEAN Journalist Roundtable: the Future of ASEAN-Korean Cooperation,

된 적은 있었다.) 이 두 단어의 갑작스런 등장은 제주포럼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아세안 창립 50주년이라는 특정 개최년도의 현안을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차트 2〉는 2017년 세션 제목에 대해 대응분석을 한 것이다. 대형 종합포럼답게 환경 문제(eco, friendly), 4차 산업혁명(industrial, fourth, revolution)에서부터 미행정부(U.S. administration), 제주(Jeju)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전통 안보 이슈 중 테러, 인간안보, 전염병 등은 아직 세션 제목에서 발견하기 힘들다. 한편, 지속가능성(sustainable)이나 환경(green)은 제주포럼

〈차트 2〉



의 세션주제로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 안보이슈의 경우에도 핵 문제(non-nuclear, denuclearize) 외에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세션의 제목을 기준으로 볼 경우, 2017년 제주포럼도 2016년 제주포럼과 마찬가지로 Dialogue and Research Monitor(DRM)를 통해 나타난 아태지역 “전형적인” 다자안보대화과 다소 다른 성격을 보인다. 제주평화포럼으로 개최되던 기간에는 전통, 비전통 안보 이슈보다는 다자안보협력과 한국에 집중하였다. 대형 종합포럼으로 변모한 이후에 주제의 다양성이 훨씬 증가하였지만, 전통적 안보 이슈는 역시 핵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졌고, 비전통 안보, 신 안보 이슈는 기후와 환경 외에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세션 제목은 몇 단어에 지나지 않고 포괄적 개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서 각 세션에서 실제로 다루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각 세션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션을 녹취한 기록이나 요약한 자료가 필요하다. 다행히 제주포럼 결과자료집에는 기조연설문인 경우는 전문이, 세션토의일 경우에는 요약문이 포함되어 있다.

IV. 제주포럼의 기조연설과 세션토의: 2017년 vs.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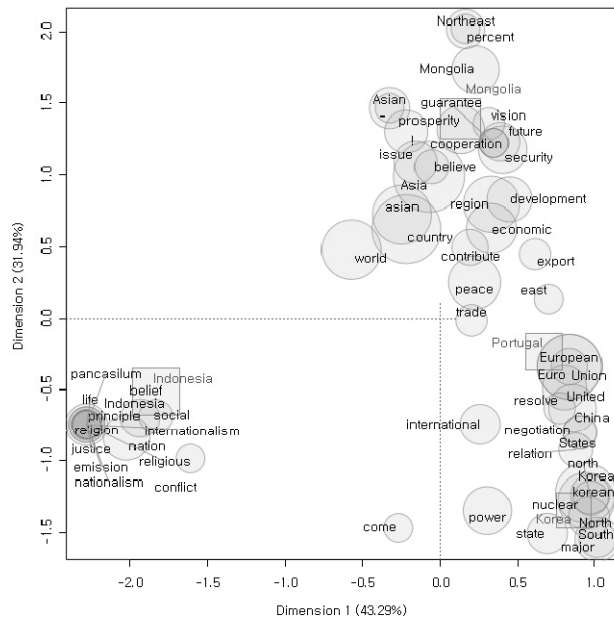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제주포럼에서는 기조연설자들이 대주제에 관하여 각자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식으로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대주제는 “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New Trends and the Future of Asia, New Waves in Asia, Designing New Asia”와 같이 포괄적이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기조연설자는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필요/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

1. 2017년 기조연설

2017년 제주포럼에서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제5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아니발 카바코 실바 전 포르투갈 대통령, 푼살마 오치르바트 전 몽골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2017년 제주포럼의 대주제는 “Sharing a Common Vision for Asia’s Future”였다. 3명의 기조연설자의 연설문을 대응분석한 결과는 <차트 3>과 같다.

이 차트를 보면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실바 전 포르투갈 대통령, 오치르바트 전 몽골 대통령은 각기 다른 주제에 관하여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기조연설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트에서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몽골리아라고 표시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단어들은 각 기조연설자들이 자주 사용한 단어들을 나타내고 있다.

〈차트 3〉



* 차트에서 각 기조연설자는 각자의 국적으로 표시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자살 테러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종교적 극단주의를 배격하고(life, conflict, belief, religion), 인도네시아가 평화와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디딤돌인 ‘판차실라’에 대해 얘기하고(Indonesia, social principle, pancasilum), 국제적으로도 판차실라를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엘 고어 전 미국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기후변화가 지구와 인류문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emission).

한편 실바 전 포르투갈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광대한 유로 존(euro)

을 포함한 매력적인 시장임을 강조하고, 한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resolve)하고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국(China)이나 미국(United, States)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치르바트 전 몽골 대통령은, 평화 없이는 번영이 없고 번영이 없이는 평화가 없다고 지적하고(peace, prosperity), 경제적 안정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평화를 보장받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에 관하여 언급하였다(guarantee, cooperation, economic, trade, export). 특히 몽골과 한국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Mongolia).

이 차트를 보면 세 명의 기조연설자들이 같은 주제를 놓고 얘기하였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며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17년 제주포럼의 대주제—“Sharing a Common Vision for Asia’s Future”—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이 몽골 전 대통령의 연설문(Asia, vision, future)을 제외하고 다른 기조연설자의 연설문에서는 자주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이나 포르투갈 전 대통령이 공유하고자 하는 미래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은 ‘판차실라’를, 포르투갈 전 대통령은 한-유럽협력 강화를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전으로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기조연설의 대응분석 결과는 어쩌면 2017년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017년은 냉전 이후 불확실성이 가장 높다는

전망이 있었을 정도로, 자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충돌하고,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갈등이 심화되고, 기존에 합의되었던 국내외적 질서가 도전 받는 한 해로 인식되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존의 사고방식이 도전 받음에 따라 국가든 개인이든 미래를 위한 공동의 비전을 찾아 수렴하지 못하고, 각기 다른 생각을 각기 다른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사고하면서 각자도생의 길을 가는지도 모른다.

2. 2016년 기조연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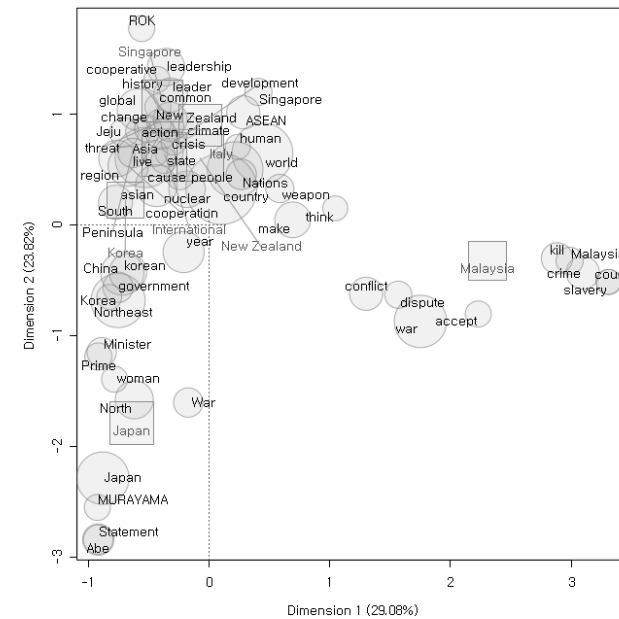
2016년 제주포럼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짐 볼저 전 뉴질랜드 총리, 고축통 전 싱가포르 총리,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 총 7명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 중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2013년에도 제주포럼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2016년 제주포럼의 대주제는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이었다. 7명의 기조연설자의 연설문을 대응 분석한 결과는 <차트 4>와 같다.

이 차트를 보면 먼저 황교안 총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짐 볼저

8) 이 부분은 2016년 연구에 있는 내용이나 2017년 기조연설을 분석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함시켰다. 한인택, “제주포럼을 통해 본 평화와 협력에 관한 역내 엘리트의 인식,” 『2016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제주평화연구원, 2016).

<차트 4>



* 차트에서 각 기조연설자는 각자의 국적으로 표시. 반기문 유엔 총장의 경우는 한국(Korean) 대신 국제(International)로 표기

총리, 고축통 총리, 엔리코 레타 총리가 기조연설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에 겹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대주제에 포함된 단어들이거나 연관된 단어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1년 후인 2017년 기조연설자들에 비해 매우 다른 모습이다.

물론 2016년 기조연설자 중에서도 포럼 대주제와 연관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기조연설자와 동떨어진 생각을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다. 무라야마 일본 총리와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그런 경우인

데, 앞의 기조연설자들에 비해서 기조연설문에서 상당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따라서 상당히 다른 주제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 무라야마 총리의 경우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문제에 관하여, 마하티르 총리는 전쟁, 살인, 범죄 등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

기조연설문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주제나 표현의 유사성이 2017년 보다는 2016년이 더 높았다. 기조연설자들이 2016년처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연설하는 것과 2017년처럼 서로 상이한 단어를 사용하여 연설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닌 것일까?

기조연설자들이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여, 공동의 행동이나 협력적 리더십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이해가 첨예하게 갈려서 공동의 행동이나 협력적 리더십의 출현이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북 간의 대화에서 핵무기나 통일이라는 단어가 양측에 의하여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핵문제나 통일에 대하여 남북한 사이에 공동의 인식이 존재하고 조만간 공동의 행동이나 협력적 리더십이 생길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공동의 관심사와 의제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2017년은 “아시아 미래 비전 공유”라는 대주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역내 엘리트 간 인식의 공유가 감소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2017년과 2016년 제주포럼에서는 기조연설에서만 아니라 외교관 좌담회에서도 포럼 대주제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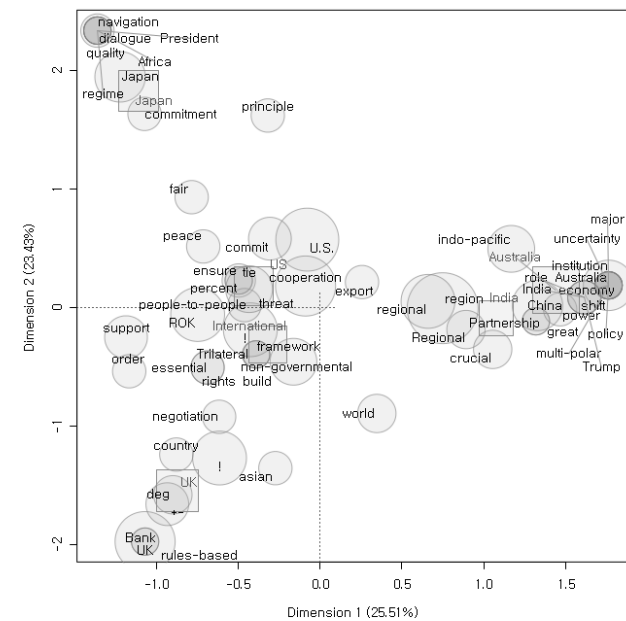
기조연설과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연사만 바뀐 것이다. 다음에서는 외교관 좌담회에서 이루어진 토의 내용을 분석한다.

3. 2017년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Sharing a Common Vision for Asia's Future

2017년 외교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아시아 미래 비전 공유”를 주제로, 박진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찰스 헤이 주

〈차트 5〉



* 차트에서 각 패널리스트는 각자의 국적으로 표시. 양허우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의 경우는 중국(China) 대신 국제(International)로 표기

한 영국대사, 비크람 도레스와미 주한 인도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양허우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이 참여하였다. 사회자를 제외한 모든 참가자가 현직 외교관이다(〈차트 5〉 참조).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양허우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의 발언 내용은 협력과 무역을 강조하면서 의제나 표현에 있어서 겹치고 있다. 미국대사대리는 미국(US)이 경제협력(cooperation), 민간 대 민간 외교(people-to-people) 등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지키고자 하며(commit), 한미양국은 공정한(fair) 무역을 증진하고 수출(export)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양허우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삼국협력의 전략적 비전이 민간 대 민간(people-to-people) 교류를 통하여 정부 차원의 협력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유무역협상을 계속하고, 협력을 위한 독자적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심사항이 유사하다고 해서 주장도 유사한 것은 아니다.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양허우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모두 무역에 관하여 얘기하였지만,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공정한(fair)’ 무역을, 양허우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자유로운(free)’ 무역을 강조하였다.

비크람 도레스와미 주한 인도대사와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의 발언 내용도 겹치는데, 주한 인도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Indo-Pacific)이 지금 중국의 부상(China)과 함께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은 한-인도, 한-호주(Australia), 인도-호주와 같은 동반자 관계(Partnership)의 강화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는 지구가 다극체제로 전환되는(multipolar, shift) 변곡점에 와 있다고 하고, 호주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비해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은 동떨어져 있는데, 영국대사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상을 시작할 것이며(negotiation), 영국은 법률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based)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지하며(commitment), 인도양을 넘어 아프리카(Africa)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행의 자유(navigation)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아시아 미래 비전 공유”라는 공통의 주제에 대해서 각국의 대사는 다양한 생각을 표명하였다. 발언의 대부분은 각국의 입장이나 전략을 설명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호주나 인도는 인식적으로 공통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외였던 것은 미국대사대리와 삼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의 발언이 갖는 유사성이다. 삼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의 국적이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대사대리와 생각이 유사하고 표현도 비슷하였다. 이러한 유사성은 미국대사대리는 한미 간의 협력을 무역과 민간교류를 통해서 증진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삼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한중일의 협력을 민간교류를 강화해서 정부 수준의 협력을 넘어서며, 삼국 간에 RCEP나 TPP 등의 무역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히 무역에 관하여 얘기하면서 각기 공정한 무역과 자유로운 무역을 주장한 것처럼 양자 간에 차별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미국대사대리와 삼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의 발언이 갖는 유사성은, 국적도 중요하지만 맡은 역할에 따라 주장이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만약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이 중국 외교관으로서 발언하였다고 한다면 THAAD 문제 등에 관하여 발언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허우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한중일 삼국의 협력을 증진하여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 문제를 넘어서는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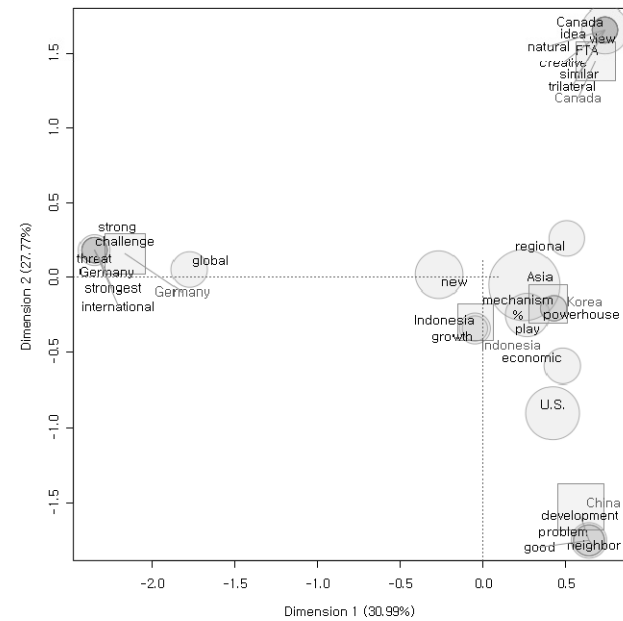
4. 2016년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⁹⁾

2016년 외교관 라운드 테이블은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을 주제로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사회를 맡고, 론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 에릭 월쉬 주한 캐나다대사, 존 프라세티오 주한 인도네시아대사, 오준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대사, 샤주캉 전 유엔 경제사회담당 사무차장이 참여하였다.

9) 이 부분은 2016년 연구에 있는 내용이나 2017년 외교관 라운드테이블을 분석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함시켰다. 한인택, “제주포럼을 통해 본 평화와 협력에 관한 역내 엘리트의 인식,” 『2016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제주평화연구원, 2016).

〈차트 6〉



〈차트 6〉은 이들의 발언을 대응 분석한 것이다. 각국 대사가 사용한 단어군 옆에 그들의 국적을 표기하였다. 이 차트는 각국 대사들이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발언하고 있지만 각기 상당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그중 사용하는 단어가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물론 준비해온 원고를 순서대로 낭독하는 개회식과는 달리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참석자들이 다른 참석자와 같은 생각을 해도 동일한 내용의 반복을 피하고 다른 참석자가 다루지 않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사들의 발언이 상이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이 반드시 그들 간에 공유하는 인식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의 내용에 공감을 하고 논의된 내용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언이 이어질 경우에는 참석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공통성이 증가하고 공통된 단어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위치하게 된다. 차트를 근거로 할 때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한 대사들 간에는 아직 공통된 인식이 덜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긍정적인 것은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동류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독일, 캐나다, 중국 사이의 중간지점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그들 사이에 중재자나 가교의 역할이 가능해 보인다. 물론 한국보다는 인도네시아가 중간지점에 더 가깝다.

각국 대사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대사의 경우 난민 문제, 테러 문제, 기후변화 문제 등 한 국가나 지역을 넘는 새로운 국제안보적 위협이 등장했음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협력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과 아시아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일은 한국의 동반자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발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독일대사의 경우 아시아 지역적 문제나 전통적 안보위협 — 예컨대 중국의 부상이나 미중 갈등, 북핵 문제 — 보다는 유럽이나 국제 문제, 비전통 안보 문제에 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 및 아시아와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앞의 대응 분석 차트에서 본 것과도 일치한다.

인도네시아대사는 중국의 부상, 영토 분쟁, 미중 갈등, 북핵 문제,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 중국의 저성장 등의 문제를 언급하여서 주요관심사가 아시아 역내 전통적 안보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트 상에는 인도네시아대사가 열거한 구체적 사항들이 다 나오지 않고 반복

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나오지만 인도네시아의 관심이 지역과 경제에 있음을 차트에서도 알 수 있다.

캐나다대사의 경우 캐나다가 지리적 거리와 중견국이라는 위상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모든 이슈에 관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평화와 안보의 관점에서 아시아 지역의 여러 문제에 대해 참여하겠다고 발언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북극해 연안국 입장에서 한중일 3자간 북극해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동북아협력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달리 말하면 캐나다대사의 경우 아시아의 신질서나 협력적 리더십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고, 동북아나 아시아 문제를 대하는 캐나다의 자세나 입장을 설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준 UN대사의 경우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리더십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높아진 위상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갖고 ODA, 기후변화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준 대사는 아시아 내에 역내 협력 장치가 없으나 아시아 내에서 마땅히 리더의 역할을 할 국가가 부재하다고 평가하였다. 차트를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powerhouse, mechanism, play 등의 단어가 부각된 것은 그의 주장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샤주캉 전 유엔 경제사회담당 사무차장은 중국이 주변국과 우호적 선린관계를 중시하며, 평화, 안정, 번영이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단결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통합모델은 참고는 하되 전적을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차트는 이러한 중국 발표자의 주장과 일관되게 China, development, problem, good, neighbor를 보여주고 있다.

차트를 통해서, 그리고 요약문의 검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한편으로 당연한 얘기이나 공동의 주제에 대해 논하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본다는 사실이다. 독일대사는 유럽의 문제, 글로벌 문제를 중시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아시아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으며, 캐나다대사는 동북아나 아시아를 대하는 캐나다의 자세와 입장을 주로 설명하였고, 오준 대사는 유엔 내부에서나 아시아 역내에서 아시아 국가 간 협력 장치가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의도를 설명하고 합심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인도네시아대사의 경우만 자국의 정책이나 관점을 설명하는 대신 아시아 지역 내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열거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즉, 가장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지역’의 관점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그가 발언의 모두에서 제주포럼의 대주제를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2016년 외교관 라운드테이블의 발언을 대응 분석한 차트에서 공통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중앙부분에 위치하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 연사의 발언이 자국중심적보다는 지역중심적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앞에서 2017년 기조연설을 대응분석한 결과,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실바 전 포르투갈 대통령, 오치르바트 전 몽골 대통령은 비록 공통 대주제에 관하여 연설하였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다

른 단어를 사용하여 기조연설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표현의 상이성의 원인을 혹시 2017년의 분위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추론하여 보았다. 2017년에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존의 사고방식이 도전 받음에 따라 국가든 개인이든 각자도생의 길을 가는지도 모른다고 추측해 본 것이다.

외교관 라운드 테이블 발언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추론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다. 2016년 외교관 라운드 테이블 발언을 분석한 결과, 패널리스트 간의 생각이나 표현의 공통성이 2017년보다 높다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기조연설문의 분석이든 외교관 라운드 테이블 발언 내용의 분석이든 샘플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7년 제주포럼과 2016년 제주포럼에서는 각기 그해의 대주제에 관하여 논하는 기조연설 세션과 외교관 라운드테이블이 있었다. 이와 아울러 대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에 관한 세션도 개최되었다. 2017년의 경우는 “아시아 미래를 위한 중견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전직 외교부 장관이 참여한 외교안보 글로벌리더 세션이 개최되었고(2017년 대주제: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 2016년의 경우에는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적 리더십을 향해: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학술세션이 개최되었다(2016년 대주제: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다음에서는 2017년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중견국의 역할” 외교안보 글로벌리더 세션과 2016년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적 리더십을 향해: 이

론과 실제” 세션의 결과를 분석하고 비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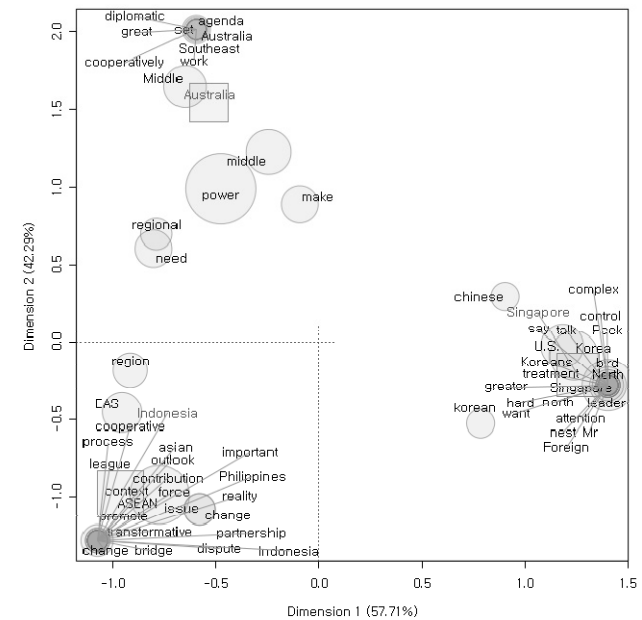
5. 2017년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중견국의 역할” 외교안보 글로벌리더 세션

외교안보 글로벌리더 세션은 박진 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토론 마티 나탈레가와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조지 여 전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 그리고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 장관이 패널리스트로 참가하였다. 앞서 살펴본 외교관 라운드 테이블은 현직 외교관들의 좌담회라고 한다면, 외교안보 글로벌리더 세션은 전직 외교수장의 좌담회이다. 패널리스트들이 현직이 아니라 전직이라는 점, 그리고 외교수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외교관 라운드 테이블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외교안보 글로벌리더 세션은 각 패널리스트들이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중견국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먼저 밝히고 그 차례가 끝난 후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고 마지막으로 청중들의 질문에 대해 질의 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내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런 경우 주제나 표현을 패널리스트가 아니라 사회자나 청중이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응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세 명의 패널리스트들은 같은 주제를 놓고 같은 세션에 참가하였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각자 다른 얘기를 하

〈차트 7〉



였다(〈차트 7〉 참조). 그런 중요한 이유는 중견국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에반스 전 장관은 그가 생각하는 중견국의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발언을 시작하였고, 마티 전 장관은 중견국에 대한 얘기 대신에 대부분 아세안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 여 전 장관은 싱가포르를 중견국이 아니라는 말부터 시작하였다.

중견국의 정의가 무엇이고, 중견국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중견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은 자칫하면 초점이 없는 논의가 될 우려가 있는데 대응 분석의 결과는 그러한 우려가 사실로 나타났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중견국(middle, power)은 에반스 전 장관의 발언에서는 중요하게 사용되나 여 전 장관이나 마티 전 장관의 발언에서는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마티 전 장관은 대부분 아세안의 업적과 미래 발전방향에 대하여 발언하였으며, 여 전 장관은 대부분 북한 문제에 관하여 발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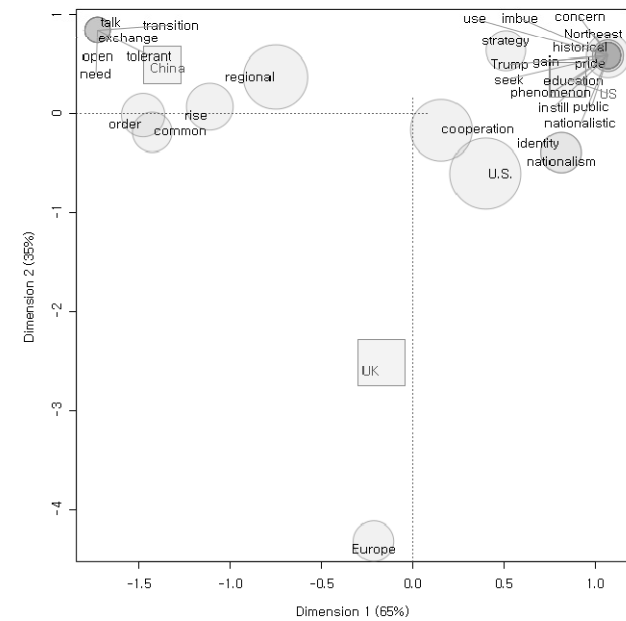
6. 2016년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적 리더십을 향해: 이론과 실제” 세션¹⁰⁾

2016년 제주포럼에서는 “Towards New Cooperative Leadership in Asia: Theory and Practice”를 주제로 왕용 베이징대학 교수 겸 국제정치경제센터 소장, 존 닐슨라이트 채텀하우스 아시아프로그램 책임자, 존 들러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참가하는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들은 대학교와 싱크탱크 소속이기 때문에 현직 외교관들보다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차트 8〉을 보면 전문가들의 대화도 현직 외교관이나 전직 외교부 장관들의 대화에 못지않게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참가자는 rise, transition, open, tolerant, regional, order 등, 중국의 부상에 따른 위협인식을 달래고 중국의 부상을 포용

10) 이 부분은 2016년 연구에 있는 내용이나 2017년 세션결과를 분석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함시켰다. 한인택, “제주포럼을 통해 본 평화와 협력에 관한 역대 엘리트의 인식,” 『2016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제주평화연구원, 2016).

〈차트 8〉



하는 개방된 지역질서의 필요성을 얘기하였다. 미국 참가자는 US, strategy, Trump, nationalistic, education, concern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고 설명하고, Trump 현상을 포함한 민족주의적 경향의 발현, 그리고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화시키는 교육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 후보시절이다.)

영국 참석자의 경우 사용한 단어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시안에 대해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 참가자는 아시아에서 협력적

리더십을 달성하는 데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를 8개 나열하고 각국의 대응과 현존하는 국가적, 지역적 불안요소 등을 다양하게 언급하였다. 이 차트를 근거로 보면 현직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학자들 간에도 공유하는 인식이 크지 않다.

현직 외교관 차트에서와 달리 이번 차트에서는 참가자들의 사이에서 인식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참가자도 부재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6년 외교관 라운드테이블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캐나다, 독일, 중국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였다. 한편, 2016년 기조연설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이탈리아, 한국, 그리고 UN 연사의 연설내용이 거의 겹쳤고, outlier인 일본과 말레이시아도 주제가 달랐지 취지가 다르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인식의 격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과 말레이시아도 아시아 역내 협력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기보다는, 무라야마 총리의 경우는 한일 문제의 해결을, 마하티르 총리의 경우는 전쟁의 근절을 우선 강조하였을 뿐이다.)

V. 요약 및 결론

제주포럼이 이제 주요한 역내 포럼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매년 각국의 전·현직 국가정상급 인사에서부터 현직 외교관, 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적, 소속, 역할을 가진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지역과 이슈에 관하여 논의하게 된 것은 중요한 발전이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의 연구에서는 제주포럼을 통해서 역내 엘리트들의 인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제주포럼의 대주제, 세션 제목, 기조연설, 세션토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주포럼의 참가자들이 얼마나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떤 개념을 통하여 사고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세션 제목에서부터 기조연설, 현직 외교관 좌담회, 학자들 간의 토의에 이르기까지 참석자의 역할, 위상, 소속, 주제를 불문하고 인식의 공통성과 상이성이 모두 존재하였다. 특히 상이성이 컸다. 다양한 인사들이 모여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의를 하다 보니 한편으로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특히 주최 측이 연설이나 토의의 내용에 대해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이 표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 세션의 제목을 기준으로 볼 때, 제주포럼은 역내 “전형적” 다자안보 대화에 비해서 다루는 주제와 지역에 있어서 차별성을 지녔다. 제주포럼의 초기에는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가 양대 주제였고, 대형 종합포럼으로 변신한 후에도 지역은 확장되었지만, 핵 문제를 제외한 전통 안보 문제, 환경 문제를 제외한 비전통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고 있다. 이는 2017년 제주포럼도 마찬가지였다.

- 2017년 제주포럼의 기조연설을 기준으로 볼 때, 역내 정상급 지도자들은 비록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라는 공통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어휘도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물론 2017년 제주포럼의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역내 최고 엘리트 수준에서 인식의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 외교관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각국의 현직 대사들이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라는 공통의 주제에 대해서 토의하였는데, 이들 간에는 유사성과 상이성이 모두 발견되었다. 특히 호주대사와 인도대사는 인식적으로 공통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외였던 것은 미국대사대리와 삼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의 발언이 갖는 유사성이다. 삼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의 국적이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대사대리와 생각이 유사하고 표현도 비슷하였다. 미국대사대리와 삼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의 발언이 갖는 유사성은, 국적도 중요하지만 말은 역할에 따라 주장이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 외교안보 글로벌리더 세션에서는 전직 외교부장관 3명이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중견국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먼저 밝혔다. 이들의 발언을 분석하면, 세 명의 패널리스트들이 같은 주제를 놓고 같은 세션에 참가하였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각자 다른 얘기를 하였다. 그런 중요한 이유는 중견국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일 것이다. 중견국의 정의가 무엇이고, 중견국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중견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만약 2017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비슷한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아래와 같은 일반화나 제안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인식의 공유를 위한 노력은 특히 고위급 엘리트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 정상회의나 장관회의를 늘리고, 고위급 인사들과 실무급 인사들 간의 소통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대화를 촉진하고 결과도 도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프레임(framing)이 필요하다. ‘중견국’처럼 합의가 어려운 개념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수렴시킬 수 있는 포컬 포인트(focal point)가 될 수 있는 개념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 삼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의 발언에서 보았듯이 만약 역할이 입장을 결정한다면 역내에 국제기구나 초국가기구를 늘리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국의 입장이 아니라 지역 공통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나 집단의 증가는 역내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제주포럼에서 역내 엘리트들이 생각의 다양성을 표출하고 공통성을 발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자안보대화로서 제주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내 평화와 번영의 달성이다. 어떻게 하면 제주포럼에서의 논의가 정책결정과 국제협력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Ball과 Taylor에 의하면 Track 2 대화는 다음과 같이 정책결정과 국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¹¹⁾

첫째로, 정부에 대한 조언이다. 정부에 대한 조언은 Track 2 대화의 중요한 기능으로, Track 2 대화가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힘든 장기적인 문제라든가 정부가 아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가장 유용하다.

둘째로, Track 1 대화는 너무 새롭거나 민감해서 다루기 힘든 아이디어들을 창안하거나 검증하는 ‘실험실’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로, Track 2 대화는 Track 1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외교적 대안 통로(route)로 기능할 수 있다. 예컨대 지금의 한일관계처럼 공식적 양자 회담의 개최도 힘들고 양자 이슈의 토의도 힘든 경우 Track 2 다자대화를 이용해서 양자 접촉도 가능하고 협의곤란한 양자 이슈는 유보하고 협의가능한 다자적 이슈부터 논의할 수도 있다.

넷째, 사회화(socializing; socialization) 기능으로 Track 2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이나 국제적 규범에 대한 이해의 제고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만약 북한이 Track 2 대화에 정기적으로 참가할 경우 지역이나 국제적 규범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11) Ball, Desmond, and Brendan Taylor, “Reflections on the Track Two Proces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Hadi Soesastro et al., eds., *Twenty Years of ASEAN ISIS: Origins, Evolution, and Challenges of Track Two Diplomacy* (ASEAN ISIS 2006).

높여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베트남이 그랬고 중국도 그러한 경험이 있다.¹²⁾

제주포럼이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종합포럼으로서 충분한 “양적” 성장을 이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제주포럼이 어떻게 하면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정책결정과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Track 1.5/Track 2 다자안보대화로서 “질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12) Nguyen Hung Son, “베트남의 Track 2 외교 경험: 북한에의 함의,” JPI PeaceNet 2015-12.

■ 관련 웹사이트 ■

제주포럼(<http://www.jejuforum.or.kr/>).

Dialogue and Research Monitor(<http://www.jcie.or.jp/drm/>).

KH Coder(<http://khc.sourceforge.net/en/>).

• 국문

이 연구에서는 제주포럼의 참가자들이 얼마나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떤 개념을 통하여 사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서자료의 분석에 특화된 KH Coder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주포럼의 대주제, 세션 제목, 기조연설, 세션 토의내용을 분석하였다.

기조연설에서부터 현직 외교관 좌담회, 학자들 간의 토의에 이르기까지 참석자의 역할, 위상, 소속, 주제를 불문하고 인식의 공통성과 상이성이 모두 존재하였다. 특히 상이성이 컸다. 다양한 인사들이 모여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의를 하다 보니 한편으로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특히 주최 측이 연설이나 토의의 내용에 대해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이 표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주포럼에서 역대 엘리트들이 생각의 다양성을 표출하고 공통성을 발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자안보대화로서 제주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대 평화와 번영의 달성이자. 어떻게 하면 제주포럼에서의 논의가 정책결정과 국제협력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제주포럼, 다자안보대화, 엘리트 인식, 질적 자료 분석, KH Coder

• 영문

Using an open-source qualitative data analysis program, KH Coder, this study analyzes the speeches, presentations, and comments by the 2017 Jeju Forum speakers in order to learn how similar or different their views are, what issues they are interested in, and what concepts they employ in discussion.

In some cases, speakers are found to have common views, to focus on same issues, or to think through similar concepts, despite differences in their roles, nationality or occupation. But more frequently, they have different views, they look at different issues, or they rely on different concepts. Such variations are expected, as speakers from different backgrounds discuss diverse issues and the organizer allows the speakers to express their ideas freely.

While it is important for the Jeju Forum to provide a venue where speakers express their ideas freely, the purpose of the Jeju Forum is to help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in Asia. Therefore, much deliberation is required on how to help the ideas expressed at the Jeju Forum advance the cause of the Jeju Forum, that is,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Key words] Jeju Peace Forum,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Qualitative data analysis, KH Coder

상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에 나타난 안보 엘리트들의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1. 들어가며

1. 문제 제기

2002년 이후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주관으로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상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 혹은 아시아 안보정상회담(The Asia Security Summit)에는 매년 50여 개국 600명 이상의 아시아 지도자들이 모여 아시아의 안보와 관련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펼친다. 2017년 제16차 회의에 맬컴 턴불(Malcom Turnbull) 호주 총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로 5개의 본회의(Plenary Session), 2개의 장관급 라운드 테이블, 3개의 특별회의가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이는 국제 저명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인 현안을 토론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및 인류의 번영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제주평화연구원이 매년 주관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

반면 패널 구성, 운영 방식, 주제 수렴도 등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여 연구한 후 상호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그릴라 대화에서 논의된 정치지도자들의 연설과 발언 등은 심도 있게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그릴라 대화에서 도출된 자료 중 정보 이용이 가능한 결과물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정치지도자들이 안보, 평화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는 2016년 공동 과제의 이론 편에서 제기한 평화의 관념의 변천, 즉 종교적 평화—시민적 평화—국제안보—인간안보—생명의 정치 등의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 또한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제주포럼의 가치와 어떤 면에서 공감과 차이가 발견되는지 비교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는 향후 포럼 연구의 방향을 가늠하는 연구 자료의 축적을 위한 첫 시도이기도 하다.

2.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2017 상그릴라 대화’에 나타난 안보 엘리트들의 국제

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survey)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상그릴라 대화에서 발표된 안보 엘리트들의 발언록(manuscript)을 관련 홈페이지에서 입수하여 자료가 담고 있는 어휘 분석을 통해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서론에 해당하는 I절에 이어 II절에서는 상그릴라 대화에 대한 개괄적인 서술로서 2017년에 진행된 기조연설, 회의, 세션(패널)에 대해 소개한다. 이는 본격적인 조사와 분석에 앞서 사전 전체의 성격을 띤다. III절에서는 상그릴라 대화를 주관하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입수한 포럼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도출된 어휘 빈도 분석 결과를 서술한다. 여기에는 어휘 클라우드 및 군집표 등이 포함된다. 자료의 취합 및 가공은 Nvivo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추출된 자료는 별도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분석은 기조연설, 5개의 본회의, 특별 세션의 3개 패널을 각각 묶었으며 전체 본회의와 전체 특별 세션 패널, 그리고 본회의와 특별 세션을 모두 모아 2017 상그릴라 대화의 모든 패널에 대한 전체 군집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 IV절에서는 이번 조사의 결과와 의의에 대하여 토론하며 마치도록 하였다.

II. 상그릴라 대화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2002년 시작된 상그릴라 대화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회의는 학술적 토론 보다는 실질적인 맥락에서의 안보협력 이슈를 다룬다. 연사들은 본회의(Plenary Session)와 일정 주제에 따라 구분되는 특별 세션(Break-out Groups)에 참여하며 참여자들은 주로 국방 및 안보 관련 각료급 인사와 고위급 실무자들이다. 회의의 의제는 매우 포괄적인 맥락에서 선정되지만 아시아 지역의 방위 및 안보와 관련된 도전으로 제한되며 각 회의에서는 주어진 안보 이슈를 풀기 위한 정책 제안과 발의(initiatives)를 목표로 한다.

예컨대 해양안보, 경량화된 무기의 확대, 지역 안보체 형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재난 대비 등이 다뤄진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우선 사용 금지(no first use of force)’ 구상은 상그릴라 대화가 도출해낸 주요 성과 중의 하나다.¹⁾

1. 본 회의의 의제와 세션의 구성

2017년 상그릴라 대화는 주관기관인 IISS의 존 칩프먼(John Chipman) 소장의 개회사와 기조연설자인 맬컴 턴볼 호주 총리의 연설을 시작으로

1) 상그릴라 대화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https:// www.iiss.org/en/events/shangri-la-dialogue/about-s-shangri-la-s-dialogue](https://www.iiss.org/en/events/shangri-la-dialogue/about-s-shangri-la-s-dialogue)).

5개의 본회의를 진행하였다. 본회의의 각 세션별 대주제와 발언자는 <표 1>과 같다.

<표 1> 본회의 주제와 발언자

본회의	주제	발언자
1회의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The United States and Asia-Pacific Security)	-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국방장관
2회의	규칙에 기반한 지역 질서의 유지(Upholding the Rules-Based Regional Order)	- 토모미 이나다(Tomomi Inada), 일본 국방장관 -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국방장관 - 실비 굴라드(Sylvie Goulard), 프랑스 국방장관
3회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 관리(New Challenges for Crisis Management in the Asia-Pacific)	- 다토 세리 히사무딘 툰 후세인(Dato' Seri Hishammuddin Tun Hussein),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 하리짓 싱 사잔(Harjit Singh Sajjan), 캐나다 국방장관 - 자바이르 마흐무드 하야트(Zubair Mahmood Hayat), 파키스탄 합동참모총장
4회의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 배경 발견하기(Finding Common Ground on Regional Security)	- 라미자드 라쿠드(Ryamizard Ryacudu),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 르 루옹 민(Le Luong Minh), 아세안 사무총장 - 리카르도 에이 데이비드 주니어(Ricardo A David Jr), 필리핀 국방정책 차관
5회의	글로벌 위기와 지역 안보(Global Threats and Regional Security)	- 마크 미첼(Mark Mitchell), 뉴질랜드 국방장관 - 알렉산더 바실리에비치 포민(Alexander Vasilyevich Fomin), 러시아 국방차관 - 응앵헨(Ng Eng Hen), 싱가포르 국방장관

2. 특별 세션의 의제와 패널 구성

한편, 동시에 진행된 특별 세션에서는 총 3개의 패널이 구성되었다. 패널별 주제와 발언자들은 <표 2>와 같다.

본회의가 참가국의 각료급 인사들로 구성되어 시대와 공간에 대해 보다 넓은 주제를 다루었다면 특별 세션은 실질적인 업무를 다루는 고위급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의제를 다루었다. 또한 진행 방식도 본회의가 발언자의 주제발언이 있고 이에 대해 청중으로 참석한 언론인, 학자, 전문가들의 질문과 답변이 진행된 반면, 특별 세션은 발언자들의 발언 이후 참석자 간 상호 토론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다르

<표 2> 특별 세션의 패널, 주제, 진행 및 발언자

패널	주제	진행 및 발언자
1패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핵의 위험성 (Nuclear Dangers in the Asia-Pacif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마크 피츠패트릭 IISS 미국 지부 소장(Mark Fitzpatrick, Executive Director, IISS-America) - 시게오 야마다, 일본 내각 평의원 겸 국가안보 담당 사무총장(Shigeo Yamada, Cabinet Councillor, National Security Secretariat, Japan) - 장 크리스토프 벨리야드 EU대외정책정책국 정치 담당 사무총장(Jean-Christophe Belliard, Deputy Secretary-General, Political Affairs; Political Director,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 야오 윤주 중국인민해방군 예비역 소장(Major General (Retd) Yao Yunzhu, Director Emeritus, Center on China-America Defense Relations, Academy of Military Science, People's Liberation Army, China) - 하정열 한국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겸 예비역 소장(Major General (Retd) Ha Jungyul, Vice Chairman, Policy Committee,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Head of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The Institute for Democracy, DPK)

2패널	지역협력의 새로운 유형(New Patterns of Security Coop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팀 허슬리 IISS 아시아 담당 소장(Dr Tim Huxley, Executive Director, IISS-Asia) - 마크 빈스킨 호주 방위군 공군 대장(Air Chief Marshal Mark Binskin, Chief of the Defence Force, Australia) - 유 당 툰 미얀마 국가안보 고문(U Thaung Tun, National Security Advisor, Union Government of Myanmar) - 드니 메르시에 NATO 최고사령부장군(General Denis Mercier, Supreme Allied Commander Transformation, NATO) - 헤 레이 중국인민해방군 군사학교 중장(Lieutenant General He Lei, Vice President, Academy of Military Science, People's Liberation Army, China)
3패널	해양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실천 조치 (Practical Measures to Avoid Conflict at S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닉 차일드 IISS 해양안보 담당 펠로우(Nick Childs, Senior Fellow for Naval Forces and Maritime Security, IISS) - 부이 반 남 베트남 공공 안전부 차관 겸 상장(Senior Lieutenant General Professor Dr Bui Van Nam, Deputy Minister, Ministry of Public Security, Vietnam) - 카주아키 수미다 일본 자위대 합동참모부 차장 (General Kazuaki Sumida, Vice Chief of Staff, Joint Staff, Japan Self-Defense Forces) - 도널드 D 가브리엘슨 미국 해군 제독(Rear Admiral Donald D Gabrielson, Commander, Logistics Group Western Pacific; Commander, Task Force 73; Singapore Area Coordinator, US) - 주 보 중국 국방부 대외협력국 국장(Senior Colonel Zhou Bo, Director, Security Cooperation Center, Office for International Military Cooperation, National Defense Ministry, China)

다. 다시 말하면 본회의가 안보 이슈에 관한 정책결정자급의 현실인식, 비전, 목표 등을 밝히는 데 초점이 주어졌다면, 특별 세션은 실질적인 현안이 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자 상호간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을 따랐다.

III. 분석 결과

1. 기조연설 어휘 빈도 분석, 클라우드 분석

기조연설은 맥کم 톰볼 호주 총리가 행하였다. 그는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반면, 아시아 지역은 북한, 동해, 남중국해 등에서 안보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덧붙여 NATO와 같은 지역 안보 기구가 없어서 그러한 불안은 더욱 크다는 점을 부연하였다. 이는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커져가면서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음에도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는 역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가운데 그는 중국과 인도가 강대국으로 점차 성장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법치 같은 가치에 의해 안정이 유지되어 왔으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기후변화협정 탈퇴 선언에서 보듯이 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모호해지고 있음도 자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세안의 성공 사례를 원용하고 또한 아세안과의 연계를 통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시아가 비록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들테면 개방된 시장,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등—은 오히려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보았다.

끝으로 그는 향후 아시아가 직면할 도전에 대하여 미국의 변화와 아시아의 역동성을 인식한 가운데 평화와 자유 모두를 지키려는 노력이

이 지역에서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요지의 연설문에 대해 이 보고서에서는 자료 추출을 통한 어휘 빈도 분석으로 접근하여 보았다. 이는 <부록 1>로 수록되어 있다. 지역(region)에 대한 언급이 제일 많았고 이어서 경제적, 호주, 아세안, 중국, 전략적 등의 표현이 많았다. 이를 어휘 클라우드로 표현하면 <부록 2>와 같다.

2. 본회의 패널 어휘 빈도 분석, 클라우드 분석, 군집 분석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의 제1회의부터 제5회의까지 각 참석자의 연설 내용을 어휘 빈도 분석과 어휘 클라우드로 표시하였다. 이것 역시 <부록 3~26>으로 수록하였다. 제1회의의 경우,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대한 논의로,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단독 연설이었다. 따라서 다른 회의와는 달리 같은 패널의 다른 발언자들과 비교할 수는 없었다. 여기서는 지역(region), 중국(China), 국가/국민(nations), 안보(security) 등의 어휘 빈도가 높았다. 제2회의부터는 각국의 국방 관련 고위급 인사의 발언인데 대체로 자국의 방위 지침 및 자국의 안보 방향에 대한 소개가 많아 빈도수가 많은 언어는 각 연사의 소속 국가였다(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물론 아세안 사무총장의 경우 아세안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첫째,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제3회의 말레이시아의 다토 세리 히사무딘 툰 후세인 국방장관이 당위의 언어인 '해야만 한다(must)'를 가장 많은 빈도수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같은 회의의 자바이르 마흐무드 하야트 파키스탄 합동참모총장 역시 자국을 많이 언급한 다른 발언자들과

는 달리 아시아(Asia)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이는 제3회의의 주제 —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 관리 — 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제로서의 자국보다는 더욱 넓은 의미로서 객체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언급하다 보니 범위가 넓어졌고, 향후 실천의 방향성과 연관된 ‘태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조연설의 내용이 지역, 경제, 중국, 호주, 아세안, 지도자 등의 순으로 빈도수가 많이 도출되었다면, 제1회의에서는 지역, 중국, 미국, 태평양 등이 많이 보였다. 제2회의에서는 발언자의 국가명을 제외할 경우, 질서, 국제, 협력, 지속하다 등이, 제3회의에서는 해야만 한다, 세계, 안보, 지역, 아시아-태평양, 관리, 위기 등이, 제4회의에서는 안보, 협력, 방위, 지역, 메커니즘, 도전 등이, 제5회의에서는 위협, 글로벌, 새로운, 안보, 테러리즘, 아시아-태평양, 아세안, 중국 등이 많이 도출되었다. 기조연설과 본회의에서 발언된 어휘들 간 넓은 측면의 일관성은 관찰되었으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드러났다. 이는 우선 본회의가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지향점이 다르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각국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뜻을 맞출 만큼의 어휘의 겹침 현상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셋째, 〈부록 33~34〉는 본회의 전체의 어휘 빈도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지역, 안보, 아세안, 방위, 국제, 협력 등이 높은 어휘 빈도수를 보였으며,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이 또한 눈에 띄었는데 바로 중국이 7번째로 많이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모호하지만 포괄적인 의미의 어휘가 많이 사용된 것은 넓은 의미의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반면 구체적인 국가로서의 중국이 많이 언급된 것은 모든 참여자들이 중국을 관심 혹은 경계의 대상으로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이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가치 조화의 측면 그리고 대외적 이미지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중국이 향후 고민해야 할 대외정책의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록 39〉의 군집표를 보면, 각 본회의가 얼마나 주제에 관하여 집중력 있게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언어적 연관성을 얼마나 가지고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²⁾ 그러나 표에서 보듯이 각 연사들의 언어적 연관성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중간에 보이는 (북)한국(Korea)은 파란색 공 모양으로 표시되는데, 파란색 공은 오른쪽 끝의 위기(crisis)부터 한국 왼쪽의 지원(support), 포함(including) 등 주제별 연관성을 추정하기 어려운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는 각 연사가 같은 어휘라도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의미한다.

3. 특별 세션 어휘 빈도 분석, 클라우드 분석, 군집 분석

특별 세션은 연사들이 주제에 관하여 짧은 발언을 한 후, 이어서 발언자들 간의 토론으로 이어진다. 토론자들 역시 실무급 중에서 최고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패널 주제는 본회의보다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것들로 선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보다 주제별로 보나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으로 보나, 실천적인 어휘들이 비교적 많이 등장하였다.

2) 이 군집표는 어휘들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므로 발제자들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1패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 위협'에 관한 것으로 어떤 패널보다도 압도적으로 주제 의식이 명료하게 수렴되었다. 즉, 북한(North Korea), 핵(nuclear) 등이 일관되게 언급되었고, 이어서 중국, 한국, 일본, 전략, 대화 등이 많이 거론되었다.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언급은 매우 적었다. 이는 주제가 아시아의 안보와 관련된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맬컴 턴볼 총리의 기조연설에서도 보았듯이 미국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역할에 대한 의존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했다.

2패널은 '지역협력의 새로운 유형'에 관한 토론이었으나, 주제가 잘 응집되지 않는 모양을 보였다. 안보(security)가 제일 많이 언급되었으나, 연구(studies), 새로운(new), 함께(together), 대화(dialogue) 등이 표현되면서 새로운 유형에 대한 토론보다는 여전히 담론과 당위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새로운 유형이라는 주제가 보여 주듯이 주제의 고유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제의 포괄성은 인정하더라도 어휘의 의미를 수렴형으로 공동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문화적 고유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말하자면 관심분야의 차이는 발달된 어휘와 그렇지 않은 어휘를 낳게 되는데, 이때 양자의 구분은 의미 분화가 보다 넓으나, 좁으나로 따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자연재해'의 경우 해양에 인접한 국가에서는 그 뜻 안에 태풍, 해양, 풍수해 등을 연상시킨다면 내륙국가에서는 사막화, 공기오염, 지진 등을 연상하게 될 것이다. 이는 같은 어휘를 제시하더라도 상상력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마지막 3패널은 '해양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실천 조치'에 대한 논의이다. 언급된 것으로 눈에 띄는 것은 기술(technology), 사이버(cyber), 과정(process), 도전(challenges), 서로 다른(different), 연구(studies)

등이었다. 특별 세션의 전체 어휘 분석을 보면, 중국, 싱크탱크(think tank), 안보, 군대, 북한/한국(Korea), 군대(military), 협력(cooperation), 핵(nuclear) 등이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록 40>에서 보듯이 특별 세션의 언어적 연관성은 본 회의에 비해 비교적 구분이 뚜렷하며 언어적 연관성도 범주를 이루어 밀도 있게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오른쪽 하단의 안보, 협력, 지역, 함께, 국제적인, 아세안 등이 하나의 무리로 몰려 있고, 우측 위에는 중국, 바다, 해양, 힘, 조치, 그러나, 의문(question), 방위(defense) 등이 모여 있다. 왼쪽 끝에는 시간, 도전, ~일수도(may), 등이 모여 있고 오른쪽 위에는 (북)한국(Korea), 무기, 전략적, 핵(nuclear) 등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부록 41>은 전체 군집표를 나타낸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어휘들은 어휘적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로 중간 부분에 있는 청록색 부분이다. 즉, 중국, 국제, 남쪽의(south), 바다(sea), 꼭(just), 지금, 국가(민)의(national) 등이 일관되게 모여 있다. 또한 하늘색 공으로 표현된 싱가포르, 방위, 방법(way), 안보, 진행하는(going) 등의 어휘도 비교적 일관되게 모여 있다. 반면, 경제, 지역, 아세안, 호주, 아시아, (싱크) 탱크 등의 어휘들은 각각 사방면의 끝에 위치에 있다. 이는 발언자들이 각각의 어휘를 자신의 언어로, 각기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록 안보와 방위 개념이 정치적·군사적 개념이라 하더라도 이를 담고 있는 사회적·문화적 차이가 어휘 의미의 다양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나가며

본 연구는 동아시아 '2017 상그릴라 대화'를 대상으로 동아시아의 안보 엘리트들이 어떤 어휘 구사를 통하여 관련 의제를 토론하는지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들이 사용한 어휘를 통해 그들의 의식이 안보 관념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축적하기 위한 시도였다. 부록에 수록된 자료는 보다 다양한 교차 비교를 통해 더 많은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휘 빈도 분석과 클라우드 분석, 그리고 군집표 등을 통해 빈도 및 군집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결론으로 몇 가지 함의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첫째, 본회의는 패널과 관련 없이 발표자들은 자국 중심의 주장과 성과를 제시하였다. 지역, 안보, 아시아 등 추상적인 부분에서는 공통적인 어휘를 사용하였으나, 군집표에서 보듯이 각각의 사용 의미는 상이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특별 세션은 상대적으로 어휘의 사용이 일관되며 발언자들 간의 의미 부여도 수렴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 관련 논의인데, 연사들은 북한의 위협과 핵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대체로 공통의 견해로 수렴하였다.

셋째, 전체 회의를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중국이었다. 이는 본회의 특별 세션 등 회의의 성격이나 참여자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다. 지시체로서의 '중국'은 지역, 안보, 아시아 등 일반적, 추상적 의미의 어휘와는 다르다. 중국은 하나의 실체이며 국제정치的重要 행위자이다. 또한 상그릴라 대화가 안보 대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것은 중국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아시아의 안보 엘리트들이 모두 주시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마지막으로 '안보대화'라는 주제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비교적 사용 어휘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표상에서 보듯이 본회의보다 특별 세션이 수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특별 세션이 발제 후 발언자 간 상호 토론의 시간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호 토론은 일방적인 발표에 비하여 상대의 의견을 보다 집중하여 정청하여 듣고 발제자에 대한 질문과 답을 통해 견해를 상호 교환하며 사용 어휘의 의미를 수렴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본회의는 발언자의 일방적인 발제가 있고 상호 토론이 없으므로 발표자 간 같은 어휘를 사용했다 해도 교차하여 상호 수렴시킬 수 있는 중간 값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동화작용(同化作用)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적어도 상그릴라 대화는 본회의에서 그 나라의 방위를 대표하는 정치 엘리트의 입을 통해 국가의 방위 기조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그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주어진 문제를 공동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는 적어도 회의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 세션처럼 실무적 주제에 관한 실무급 인사들의 상호 토론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의미를 하나로 수렴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같은 주제어휘에 대한 관심사일지라도 참여자들의 의미 해석은 상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안보에 대한 지향성, 주변국과의 친소관계 등이 1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회적·문화적 맥락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즉, 국가가 수립하는 안보의 지향은 국민의 관심사, 사회적 성숙도,

민족의 역사 등 사회 저변에 깔린 오래된 합의에 의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비록 안보/방위 담론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포럼 혹은 회의(회담)에서 주어진 주제를 공동의 과제로 수렴할 수 있도록 토론의 전제로 함축해야 할 것은 상대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록

1. 기초연설 어휘 빈도 분석(분량을 고려하여 일부만 수록)

Word	Length	Count	Weighted Percentage (%)
region	6	37	2.25
economic	8	19	1.15
australia	9	16	0.98
asean	5	15	0.92
china	5	15	0.92
strategic	9	13	0.79
world	5	12	0.73
fish	4	10	0.61
peace	5	10	0.61
new	3	9	0.55
global	6	8	0.49
interests	9	8	0.49
stability	9	8	0.49
leadership	10	7	0.43
power	5	7	0.43
rules	5	7	0.43
seen	4	7	0.43
states	6	7	0.43
address	7	6	0.37
defence	7	6	0.37
east	4	6	0.37
law	3	6	0.37
minister	8	6	0.37
nation	6	6	0.37
president	9	6	0.37
regional	8	6	0.37
security	8	6	0.37
singapore	9	6	0.37
small	5	6	0.37
time	4	6	0.37
united	6	6	0.37
australian	10	5	0.31
challenges	10	5	0.31

2. 기초연설 어휘 클라우드



3. 제1회의 제임스 매티스의 어휘 빈도 분석

Word	Length	Count	Weighted Percentage (%)
region	6	30	1.33
china	5	28	1.16
nations	7	22	0.98
security	8	22	0.98
united	6	22	0.98
international	13	21	0.93
pacific	7	21	0.93
states	6	19	0.84
also	4	17	0.76
asia	4	17	0.76
countries	9	17	0.76
regional	8	17	0.76
stability	9	15	0.67
korea	5	14	0.62
people	6	14	0.62
military	8	12	0.53
order	5	12	0.53
peace	5	12	0.53
challenges	10	11	0.49
economic	9	11	0.49
must	4	11	0.49
north	5	11	0.49
continue	8	10	0.44
law	3	10	0.44
world	5	10	0.44
alies	6	9	0.40
defence	7	9	0.40
first	5	9	0.40
forces	6	9	0.40
last	4	9	0.40
minister	8	9	0.40
president	9	9	0.40
prosperity	10	9	0.40

4. 제1회의 제임스 매티스의 어휘 클라우드



5. 제2회의 토모미 이나다의 어휘 빈도 분석

Word	Length	Count	Weighted Percentage (%)
region	6	25	2.39
order	5	22	2.10
rules	5	20	1.91
international	13	15	1.43
based	5	14	1.34
cooperation	11	14	1.34
united	6	13	1.24
security	8	11	1.05
asean	5	10	0.95
country	7	10	0.95
states	6	10	0.95
united	6	10	0.95
korea	5	9	0.86
minister	8	9	0.86
building	8	8	0.76
china	5	8	0.76
north	5	8	0.76
pacific	7	8	0.76
regional	8	8	0.76
shared	6	8	0.76
continue	8	7	0.67
countries	9	7	0.67
sea	3	7	0.67
also	4	7	0.67
indo	4	6	0.57
peace	5	6	0.57
solidarity	10	6	0.57
south	5	6	0.57
australia	9	5	0.48
capacity	8	5	0.48
now	3	5	0.48
support	7	5	0.48
world	5	5	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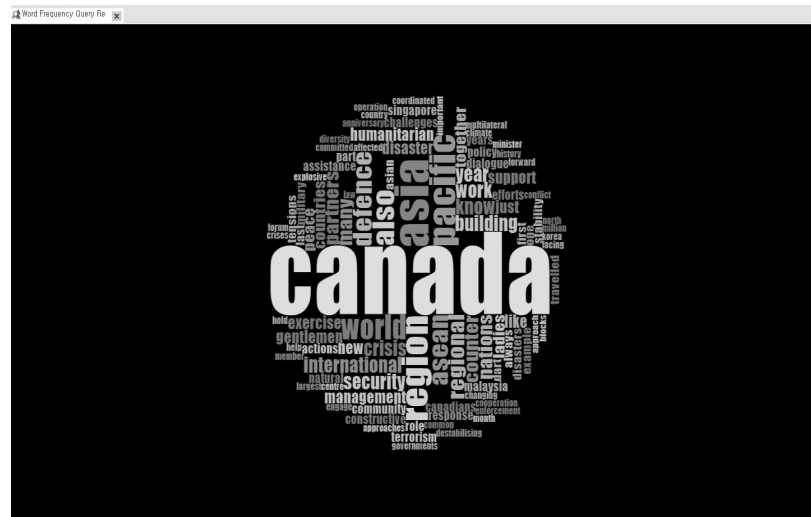
6. 제2회의 토모미 이나다의 어휘 빈도 클라우드



11. 제3회의 하리짓 싱 사잔의 어휘 빈도 분석

Word	Length	Count	Weighted Percentage (%)
canada	6	29	3.68
asia	4	13	1.71
pacific	7	10	1.32
region	6	10	1.32
also	4	8	1.05
world	5	8	1.05
asean	5	7	0.92
defence	7	7	0.92
regional	8	6	0.79
building	8	5	0.66
counter	7	5	0.66
crisis	6	5	0.66
international	13	5	0.66
know	4	5	0.66
many	4	5	0.66
nations	7	5	0.66
partners	8	5	0.66
security	8	5	0.66
work	4	5	0.66
year	4	5	0.66
countries	9	4	0.53
disaster	8	4	0.53
exercise	8	4	0.53
gentlemen	9	4	0.53
humanitarian	12	4	0.53
just	4	4	0.53
ladies	6	4	0.53
like	4	4	0.53
management	10	4	0.53
new	3	4	0.53
peace	5	4	0.53
support	7	4	0.53
together	8	4	0.53
actions	7	3	0.39
always	6	3	0.39
asian	5	3	0.39
assistance	10	3	0.39
canadians	9	3	0.39
challenges	10	3	0.39
community	9	3	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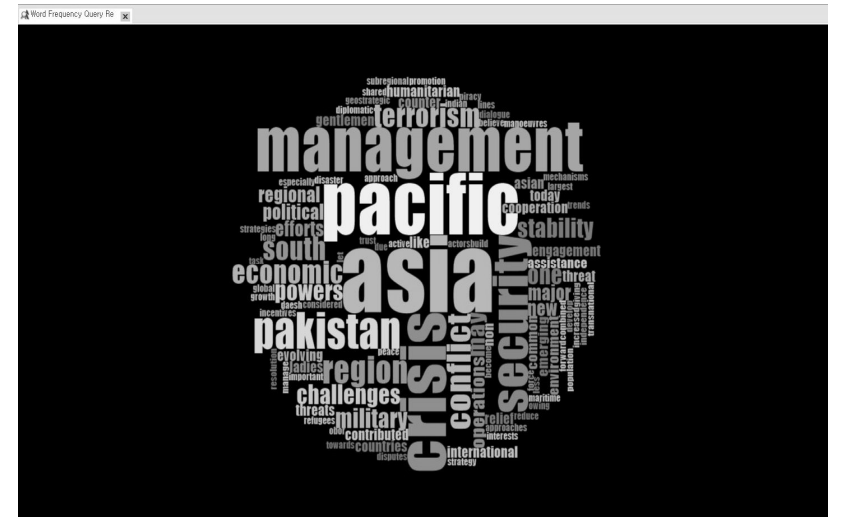
12. 제3회의 하리짓 싱 사잔의 어휘 빈도 클라우드



13. 제3회의 자바이르 마흐무드 하야트의 어휘 빈도 분석

Word	Length	Count	Weighted Percentage (%)
asia	4	19	2.79
pacific	7	15	2.21
crisis	6	13	1.91
management	10	13	1.91
security	8	10	1.47
pakistan	8	9	1.32
conflict	8	7	1.03
region	6	7	1.03
economic	8	6	0.88
south	5	6	0.88
terrorism	9	6	0.88
challenges	10	5	0.74
may	3	5	0.74
military	8	5	0.74
ops	3	5	0.74
powers	6	5	0.74
stability	9	5	0.74
ethnic	7	4	0.59
major	5	4	0.59
new	3	4	0.59
operations	10	4	0.59
political	9	4	0.59
regional	8	4	0.59
asian	5	3	0.44
assistance	10	3	0.44
common	6	3	0.44
contributed	11	3	0.44
cooperation	11	3	0.44
counter	7	3	0.44
countries	9	3	0.44
emerging	8	3	0.44
engagement	10	3	0.44
environment	11	3	0.44
evolving	8	3	0.44
gentlemen	9	3	0.44
humanitarian	12	3	0.44
international	13	3	0.44
ladies	6	3	0.44
like	4	3	0.44
non	3	3	0.44

14. 제3회의 자바이르 마흐무드 하야트의 어휘 빈도 클라우드



15. 제4회의 라미자드 라쿠드의 어휘 빈도 분석

Word	Length	Count	Weighted Percentage (%)
security	8	21	1.99
cooperation	11	19	1.80
Indonesia	9	16	1.52
asean	5	15	1.42
lists	4	14	1.33
countries	9	13	1.23
defence	7	12	1.14
region	6	11	1.04
people	6	10	0.95
country	7	9	0.86
threats	7	8	0.76
also	4	7	0.66
dialogue	8	7	0.66
million	7	7	0.66
regional	8	7	0.66
bilateral	10	7	0.66
world	5	7	0.66
challenges	10	6	0.57
maritime	9	6	0.57
mutual	6	6	0.57
number	6	6	0.57
philippines	11	6	0.57
radical	7	6	0.57
singapore	9	6	0.57
among	5	5	0.47
become	6	5	0.47
currently	9	5	0.47
general	7	5	0.47
gentlemen	9	5	0.47
honourable	10	5	0.47
ladies	6	5	0.47
malaysia	8	5	0.47
power	5	5	0.47
strait	7	5	0.47
state	5	5	0.47
sympathisers	12	5	0.47
terrorism	9	5	0.47
views	5	5	0.47
000	3	4	0.38
ideology	8	4	0.38

16. 제4회의 라미자드 라쿠드의 어휘 빈도 클라우드



17. 제4회의 르 루옹 민의 어휘 빈도 분석

Word	Length	Count	Weighted Percentage (%)
asean	5	47	4.78
regional	8	17	1.73
security	8	17	1.73
region	6	12	1.22
admin	4	10	1.02
cooperation	11	10	1.02
mechanisms	10	10	1.02
among	5	8	0.81
community	9	8	0.81
countries	9	8	0.81
plus	4	8	0.81
meeting	7	7	0.71
terrorism	9	7	0.71
asia	4	6	0.61
challenges	10	6	0.61
china	5	6	0.61
partners	8	6	0.61
peace	5	6	0.61
also	4	5	0.51
at	3	5	0.51
common	6	5	0.51
conduct	7	5	0.51
counter	7	5	0.51
cyber	5	5	0.51
dialogue	8	5	0.51
extremism	9	5	0.51
ministerial	11	5	0.51
sea	3	5	0.51
southeast	9	5	0.51
stability	9	5	0.51
violent	7	5	0.51
years	5	5	0.51
critical	8	4	0.41
declaration	11	4	0.41
defence	7	4	0.41
emerging	8	4	0.41
external	8	4	0.41
led	3	4	0.41
non	3	4	0.41
one	3	4	0.41

18. 제4회의 르 루옹 민의 어휘 빈도 클라우드



19. 제4회의 리카르도 에이 데이비드 주니어의 어휘 빈도 분석

Word	Length	Count	Weighted Percentage (%)
security	8	15	1.26
philippines	11	14	1.64
cooperation	11	13	1.53
defence	7	12	1.41
admiral	4	11	1.29
asean	5	10	1.17
challenges	10	9	1.06
partners	8	9	1.06
plus	4	8	0.94
states	6	8	0.94
regional	8	7	0.82
also	4	6	0.70
countries	9	6	0.70
china	5	5	0.59
common	6	5	0.59
concerns	8	5	0.59
cyber	5	5	0.59
international	13	5	0.59
one	3	5	0.59
sea	3	5	0.59
among	5	4	0.47
community	9	4	0.47
dialogue	8	4	0.47
group	5	4	0.47
include	7	4	0.47
issue	5	4	0.47
law	3	4	0.47
maritime	8	4	0.47
new	3	4	0.47
trilateral	10	4	0.47
views	5	4	0.47
activities	10	3	0.35
agreements	10	3	0.35
armed	5	3	0.35
bilateral	9	3	0.35
collaboration	13	3	0.35
conduct	7	3	0.35
cooperate	8	3	0.35

20. 제4회의 리카르도 에이 데이비드 주니어의 어휘 빈도 클라우드



21. 제5회의 마크 미첼의 어휘 빈도 분석

Word	Length	Count	Weighted Percentage (%)
security	8	19	1.94
new	3	15	1.54
zealand	7	15	1.54
threats	7	13	1.33
global	6	10	1.02
regional	8	10	1.02
states	6	10	1.02
collective	10	7	0.72
including	9	7	0.72
pacific	7	7	0.72
defence	7	6	0.61
international	13	6	0.61
small	5	6	0.61
threat	6	6	0.61
attacks	7	5	0.51
contribute	10	5	0.51
countries	9	5	0.51
rather	5	5	0.51
economic	8	5	0.51
maritime	7	5	0.51
south	5	5	0.51
world	5	5	0.51
also	4	4	0.41
asean	5	4	0.41
based	5	4	0.41
conflict	8	4	0.41
declaration	11	4	0.41
forum	5	4	0.41
government	10	4	0.41
list	4	4	0.41
islands	7	4	0.41
order	5	4	0.41
provides	8	4	0.41
region	6	4	0.41
rules	5	4	0.41
sea	3	4	0.41
support	7	4	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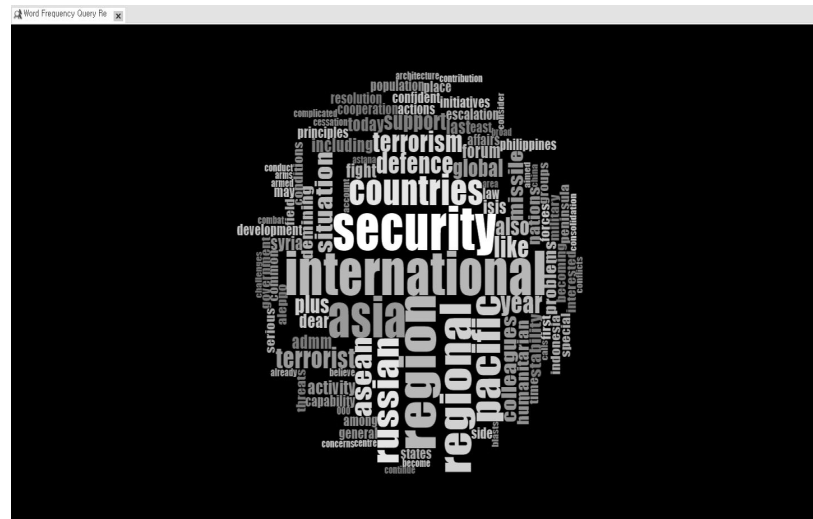
22. 제5회의 마크 미첼의 어휘 빈도 클라우드



23. 제5회의 알렉산더 바실리에비치 포민의 어휘 빈도 분석

Word	Length	Count	Weighted Percentage (%)
international	13	13	1.31
region	6	13	1.31
security	8	13	1.31
asia	4	12	1.21
regional	8	11	1.11
pacific	7	10	1.01
countries	9	9	0.91
russian	7	9	0.91
asian	5	7	0.71
defence	7	6	0.61
like	4	6	0.61
situation	9	6	0.61
terrorism	9	6	0.61
terrorist	9	6	0.61
year	4	6	0.61
also	4	5	0.51
colleagues	10	5	0.51
global	6	5	0.51
missile	7	5	0.51
plus	4	5	0.51
support	7	5	0.51
activity	8	4	0.40
admm	4	4	0.40
dear	4	4	0.40
demining	8	4	0.40
fight	5	4	0.40
human	5	4	0.40
humanitarian	12	4	0.40
including	9	4	0.40
is	4	4	0.40
last	4	4	0.40
nations	7	4	0.40
problems	8	4	0.40
stability	9	4	0.40
syria	5	4	0.40
today	5	4	0.40
actions	7	3	0.30
affairs	7	3	0.30

24. 제5회의 알렉산더 바실리에비치 포민의 어휘 빈도 클라우드



25. 제5회의 응영헌의 어휘 빈도 분석

Word	Length	Count	Weighted Percentage (%)
singapore	9	19	1.59
asian	5	14	1.17
region	6	14	1.17
trade	5	14	1.17
security	8	13	1.05
admm	4	11	0.92
one	3	10	0.84
also	4	9	0.75
plus	4	9	0.75
asia	4	8	0.67
china	5	8	0.67
last	4	8	0.67
road	4	8	0.67
year	4	8	0.67
dialogue	8	7	0.59
first	5	7	0.59
maritime	8	7	0.59
shice	5	7	0.59
thank	5	7	0.59
years	5	7	0.59
belt	4	6	0.50
countries	9	6	0.50
minister	8	6	0.50
exercise	8	5	0.42
gdp	3	5	0.42
global	6	5	0.42
korea	5	5	0.42
must	4	5	0.42
regional	8	5	0.42
stability	9	5	0.42
top	3	5	0.42
two	3	5	0.42
world	5	5	0.42
attacks	7	4	0.34
cooperation	11	4	0.34
even	4	4	0.34
meetings	8	4	0.34
new	3	4	0.34

26. 제5회의 응영헌의 어휘 빈도 클라우드



35. 특별 세션 전체 어휘 빈도 분석

Word	Length	Count	Weighted Percentage (%)
china	5	270	1.04
security	8	255	0.98
iss	4	204	0.79
international	13	202	0.79
thank	5	191	0.73
korea	5	187	0.74
shangri	6	185	0.73
military	8	154	0.59
question	8	150	0.59
north	5	148	0.57
dialogue	8	144	0.56
shangri	6	142	0.55
also	4	134	0.51
one	3	127	0.49
need	4	120	0.46
people	6	119	0.46
institute	9	117	0.45
countries	9	116	0.45
general	7	113	0.43
shangri	6	113	0.43
studies	7	113	0.43
nuclear	7	111	0.43
defence	7	109	0.42
cooperation	11	107	0.41
much	4	106	0.41
2017	4	103	0.40
16th	4	102	0.39
june	4	102	0.39
sea	3	102	0.39
delivered	9	98	0.38
maritime	8	94	0.36
like	4	93	0.36
just	4	92	0.36
new	3	91	0.35
director	8	90	0.35
technology	10	89	0.34
japan	5	82	0.31
line	4	79	0.30
region	6	77	0.30
...

36. 특별 세션 전체 어휘 빈도 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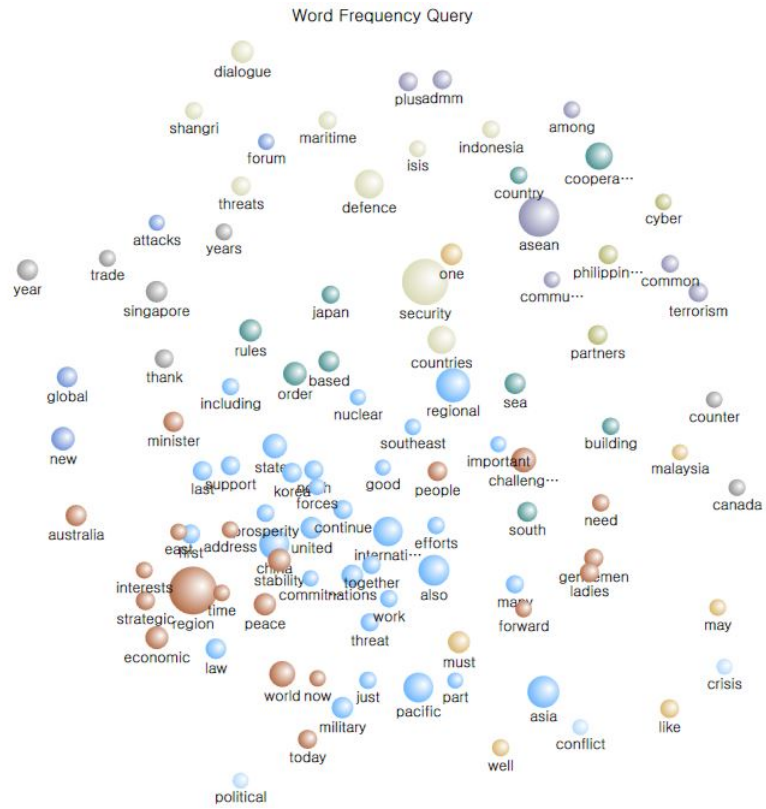
37. 상그릴라 다이얼로그 전체 어휘 빈도 분석

Word	Length	Count	Weighted Percentage (%)
security	8	445	1.05
china	5	371	0.87
international	13	299	0.70
region	6	226	0.65
also	4	239	0.56
thank	5	230	0.54
iss	4	225	0.53
korea	5	212	0.50
military	8	207	0.49
countries	9	206	0.48
defence	7	204	0.48
dialogue	8	203	0.48
asean	5	197	0.46
cooperation	11	192	0.46
north	5	189	0.44
strategic	9	183	0.43
one	3	182	0.43
asia	4	177	0.42
think	5	163	0.38
people	6	162	0.38
question	8	156	0.37
new	3	155	0.36
sea	3	153	0.36
regional	8	152	0.36
need	4	151	0.35
pacific	7	149	0.35
shangri	6	146	0.34
nuclear	7	136	0.32
like	4	132	0.31
maritime	8	131	0.31
general	7	129	0.30
just	4	123	0.29
much	4	123	0.29
order	5	121	0.28
institute	9	122	0.29
studies	7	118	0.28
challenges	10	117	0.27
japan	5	117	0.27
world	5	115	0.27
2017	4	111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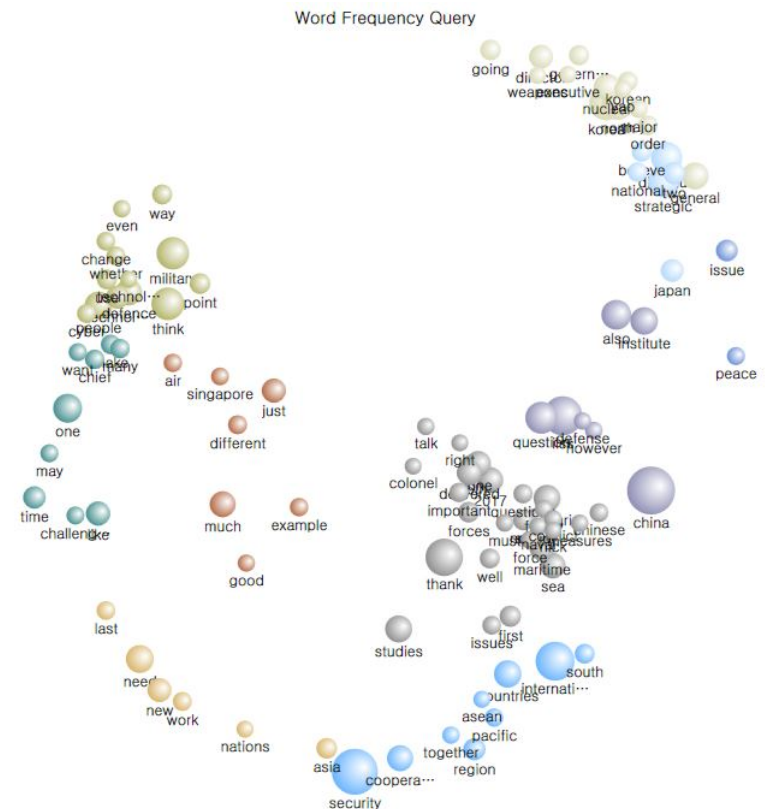
38. 상그릴라 다이얼로그 전체 어휘 빈도 클라우드



39. 본회의 어휘 군집표



40. 특별 세션 어휘 군집표



• 영문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ideas of security formed by the security elites through lexical analysis in the 2017 Asia Security Summit (Shangri-La Dialogue) organized under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held annually in Singapore. The extracted data was used to focus on frequency, cluster and cloud analysis.

We found some implications that could be derived. Firstly, abstract words such as region, security, and Asia were used in common while the meanings of each were usually different. Secondly, the special session showed that the words used between the speakers are consistent. In the debate on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the speakers have tended to agree on North Korea's nuclear issue as a kind of threats. Thirdly, China appeared as the most frequent word in the panels. As the Shangri-La Dialogue is characterized as a conference on security issues, it means that the elites were seriously taking note of China's existence and role in Asian security matters. Finally, despite the limited topic of security, the speakers interpreted same words as different ideas.

The opinions tended more likely to converge to a consensus in special sessions of the Dialogue than in the plenary one, because the latter offered no opportunity for discussions among speakers after presentation of their views, while the speakers at the special sessions could have discussion on their different views and reach consensus. Therefore, it seems the Shangri-La Dialogue has a merit of giving the opportunity to listen to the views of political elites about national defense policies, but does neither consider nor solve jointly the given issues through discussion and consultation between them. However, we can conclude that discussion between the experts on the practical issues in the special sessions at the Dialogue performs the role of sharing the given problems and converging the meaning into one.

[Key words] Asia Security Summit, Shangri-La Dialogue, Security Elites, Word Frequency Analysis, Cultural Awareness

필자 소개

▣ 이성우

현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고, 학술활동으로는 미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University of North Texas 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공공분쟁 사례연구”를 주제로 대한민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 한인택

현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UC, Berkeley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UC, Davis, University of Washington,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였음.

국제정치경제, 핵전략, 공공외교가 주요 관심분야이며, 최근 연구로 “한국형 공공외교 모델의 모색: 정책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과학적 공공외교”와 “핵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가 있음.

▣ 도종윤

현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지역통합연구부장)이며 한국유럽학회 연구이사, ‘EU연구’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임.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및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함.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ULB)에서 정치·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연세-SERI EU센터 Post-Doc 및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건국대 시간강사를 역임함.

주요 출간물로는, “환유를 통한 국제정치 텍스트의 해석: 유럽연합의 대북 전략 문서를 시험적 사례로”, “유럽회의주의와 2014 유럽의회 선거 이후의 전망과 과제”, “국제정치학에서 주체 물음: 해석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유럽연합의 개발·협력 전략: 대아시아정책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의 행위자로서 유럽연합: 이론 논쟁과 실제”, “유럽연합의 KEDO 가입: 참여 요인, 평가 그리고 함의”, “EU 매뉴얼: 유럽연합이란 무엇인가”(번역서) 등이 있음.